

월간

다함께

2002년 1월[8호]

- 아프가니스탄 전쟁
- 보신탕 논란
- 인간 배아 복제
- 월드컵과 정치
- 강준만의 '비판적 지지' 논쟁

〈다함께〉는 기업 광고 협찬을 일체 받지 않으며 구독료로 운영·발간됩니다.



다음은?

소말리아, 이라크, 예멘, 북한 ...

2002년 다함께 겨울 토론광장

변혁인가 아만인가

날짜 : 1월 24일 (목)~1월 27일 (일)
장소 : 고려대학교
주최 : 다함께



홍세화, 김수행, 권영길, 유덕상, 문정현, 홍근수, 이마드 자우하르, 한면희 등 저명한 연사들이
오늘날 가장 뜨거운 주제들에 대해 연설합니다.

- 홍세화의 언론 읽기 정치 읽기
- 김수행 교수가 보는 세계 경제 전망
-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
- 이슬람과 아랍 민중운동
- 세계화와 환경 파괴 그리고 환경 정의
-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 남북관계 왜 풀리지 않는가
- 오늘의 자본주의와 노동운동
- 2002년 대통령 선거와 민주노동당
- 한국 사회주의 운동사 1, 2, 3
- 월드컵과 정치
- 오늘의 서유럽 좌파와 그 운동

※ 저녁에는 영화 상영과 문화 행사가 있습니다.

목차

특집

- 4 이스라엘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
- 6 끝없는 전쟁?
- 8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 10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 11 보신탕 논란
- 13 인간 배아 복제
- 16 백색 공포?
- 18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 20 김대중, 선거, 진보 진영의 도전
- 23 강준만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
- 26 철도 노동자 투쟁
- 28 현재의 재외동포법 위한 판결
- 30 국가인 권위원회

저항의 세계화

- 31 브뤼셀 EU정상회담 반대 시위

격동의 세계

- 32 중국은 어디로?

- 34 엔론 파산
- 36 크리스마스의 해방

독자 편지

영화평

서평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961-4546 / Fax : 02-968-5907

E-mail : dlp@hanmail.net

http://altog.etherjinbo.net

독자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1월 13일입니다.

E-mail:editdlp@hanmail.net

야만과 희망

12월 15일 부시는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탈레반의 붕괴를 근거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가공할 파괴 무기 B-52의 웅단 폭격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완전히 파괴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고 있고 그 동안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죽었다. 수백 명의 탈레반 포로들이 미국 전투기와 특수 부대의 지원을 받은 북부동맹에 의해 살해당했다. 부시는 평범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여러 서방 국가들이 후원하는 군벌들의 아량에 내맡겨 버렸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혹독한 겨울 기근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군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마치 19세기에 열강들이 벌인 "위대한 게임"을 재연하는 듯이 보인다.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문명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미국 정부가 규정 한 나라들과 집단들의 명단이 잇달아 제시되고 있다. 소말리아, 인도네시아 아체, 필리핀 무슬림 반군 아부 사야프, 예멘, 이라크,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 지대, 북한 등.

부시 정부의 전쟁광들은 대이라크 전쟁이 "가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라고 말한다. 이라크가 탄저균 테러를 저질렀다거나 생화학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없음에도 이 점은 전쟁광들의 확전 노력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부시는 이라크에 최후 통첩을 보내고 있다. 그는 '테러와의 전쟁' 물의를 위한 형식 절차를 밟고 있다.

김대중은 부시의 비굴한 추종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는 유럽의회에서 "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 반문명적 범죄"라며, 한국이 "테러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연설했다.

그러나 부시의 전쟁은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만일 이번 전쟁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테러가 발생한다면 전쟁 옹호론자들은 뭐라 말할까? 실제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폭격 이후 이스라엘, 카슈미르, 인도, 필리핀 등에서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일 남아시아 대륙과 중동 전역에서 불안정이 심화된다면 그들은 뭐라 말할까? 이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긴장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 두 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이런 물음에 결코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초에 지배자들의 정책 자체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은 대규모 재앙을 낳았고 자본의 군사적 기구는 이라크와 발칸과 아프가니스탄을 산업화 전 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김대중은 노벨 평화상 100주년 심포지엄에서 "빈부격차가 평화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중 집권 동안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은 증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주된 원인이 실업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은 집권 내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공격했다. 그러니 다름 아닌 김대중 자신이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이제 그는 전쟁의 야만에 평범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 한다. 김대중은 미국의 보복과 세계적 패권을 위한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려 한다.

그러나 야만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반전 운동은 부시의 전쟁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자유와 평등과 희망을 전파할 것이다. 반전 운동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노동 계급 투쟁과 결합해야 한다. 우리는 두 운동의 결합을 위해 이윤과 제국주의와 전쟁의 상호 연관성을 주장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정구

아프가니스탄과 더불어 중동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테러와 보복 공격을 번갈아가며 격화되고 있다.

지난 12월 초 서예루살렘의 벤 예후다 쇼핑 센터와 북부 항구도시 하이파에서 자살 테러가 발생하자 아리엘 샤론은 이것을 빌미 삼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르단강 서안의 예넌과 베들레헴을 공격했고, 탱크와 장갑차를 몰고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에까지 밀고 들어갔다.

아파치 헬기와 F-16 전투기가 팔레스타인인 민간 거주지를 폭격해 어린이나 임산부들을 죽였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건물을 폐허로 만들고 탱크로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짓밟았다.

아리엘 샤론이 자살 테러범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다.

아리엘 샤론 자신이 전범이자 테러범이다. 그는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2천여 명을 학살했다.

자살 테러가 벌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마스 같은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조직의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스라엘 보안 경찰이 하마스의 고위 지도자 마흐무드 아부 하누드를 포함해 50여 명의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 지도자들을 살해했다.

이번 자살 테러는 아리엘 샤론의 암살 정책에 대한 팔레스타인인측의 보복 공격이었다. 26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친 자살 테러는 물론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의 테러는 지난 53년 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의 억압이 초래한 결과다. 지난해 9월 새로운 인티파다(봉기) 이래로 샤론은 9백여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했다. 같은 기간에 이스라엘인은 2백50여 명이 죽었다.

테러와의 전쟁

아리엘 샤론과 그를 지지하는 전 세계 기성 언론들은 야세르 아라파트와 팔레스타인인 테러범을 비난하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무고한 이스라엘인들을 살해한 자들을 색출, 처벌하기 위해 아라파트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며 아라파트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테러 행위로 얼룩져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평화롭게 살던 아랍인들을 테러와 인종청소를 통해 쫓아내고 세워진 나라다. 이 과정에서 75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고향에서 쫓겨나 서안과 가자 그리고 동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까지 공격해 점령했다. 1993년 평화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일부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넘겨 줬지만 여전히 군사적·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격화된 중동 민중의 반감과 분노 때문에 아리엘

‘테러와의 전쟁’

사론을 단속하는 척했다. 그 동안 아리엘 샤론의 테러 행위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미국은 지금 샤론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은 “부시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복 자체를 요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중동의 석유를 지켜주는 대가로 해마다 40억 달러를 이스라엘에 지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 돈으로 서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뿐 아니라 모든 아랍 국가들과 대적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핵심 축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에 근거해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유대인들의 로비” 덕분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후원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

하마스

평화 협상은 평범한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자유나 해방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평화협상 결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서안의 17퍼센트와 가자 지구의 60퍼센트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점령지의 이스라엘 정착민 40만 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인 거주 지역을 둘러싸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작업장에 오갈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평화 협상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삶을 전

혀 개선시키지 못했음에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는 이스라엘이나 미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반대파를 단속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팔레스타인 지도부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일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과격파 조직원 1백20여 명을 체포했다.

하마스 같은 저항 세력이 이스라엘에 저항하고 아라파트의 정책에 도전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했다. 새로운 인티파다가 시작되기 전에 하마스의 지지율은 10퍼센트였는데 지금은 60퍼센트에 이른다. 반면 작년 9월 이후 아라파트에 대한 지지율은 65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뚝 떨어졌다.

아리엘 샤론이 동예루살렘의 알 악사 모스크를 방문하여 팔레스타인인들을 격분시켜 새로운 인티파다가 시작됐다. 하지만 인티파다는 자신들의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에 대한 반대이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인티파다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1987년의 첫번째 인티파다 때문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다.

몇몇 사람들의 테러가 아니라 대중의 저항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미국과 중동의 석유 경비권 이스라엘의 억압을 끝장낼 수 있는 길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포함한 아랍 대중의 저항 운동이다. 미국은 바로 이런 대중 운동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랍의 부패한 정권과 왕족들을 후원해 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 사이의 전쟁을 끝장내는 길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주적이고 세속적 정권을 세워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이다. 이 방안은 카이로와 베이루트 등 아랍 지역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인티파다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끝없는 전쟁?

김인식

마침내 탈레반이 미국의 폭격에 굴복했다. 미국의 B-52 폭격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를 산산조각냈다. 미국은 ‘정밀’ 폭격이에 꽃은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받자 아예 “용단” 폭격으로 전술을 바꿨다. (“용단” 폭격이라는 용어는 사뭇 부드럽게 들린다. 그러나 “용단” 폭격은 10~15분마다 폭탄을 퍼부어 공격 표적을 찢터미로 만들어 버리는 폭격을 뜻한다.) B-52는 베트남 전쟁 이후 30년 만에 처음 등장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세계적 비난 여론이 높아 그 동안 B-52 사용을 자제했다.

B-52 폭격은 미국 지도자들의 무자비함을 보여 줬다. 국방부 부장관 폴 울포위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외국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지 말라는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교훈을 적용하려 한다. 만약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더라도 오래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외국인들이 자국내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폴 울포위츠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가난한 나라를 폭격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학살자들을 부추기고, 난민 탈출을 막고, 악몽이 펼쳐지는 광경을 팔짱끼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폭격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좋이 수천 명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또,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다. 헤라트의 마스라크 난민촌에는 8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전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은 경쟁 파벌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분할 통치하도록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이

권과 영토를 위한 군벌들의 전투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죽을 것이다. 독일 회담을 통해 구성된 임시 정부는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강력한 군벌 압둘라시드 도스툼은 이미 새로운 내전을 시작했다. 6개 파벌들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칸다하르를 놓고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다. 칸다하르는 혼란에 빠졌고 약탈이 끊이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전 칸다하르 주지사 굴 아카는 하미드 카르자이 임시 정부에 반 대해 제후할 것을 도스툼에게 제안했다.

탈레반은 억압과 뇌물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무장 집단들의 충성심을 끌어 냈고 그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번 전쟁에서 평범한 아프가니스탄 대중이 탈레반을 위해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 때문이다. 이제 탈레반은 붕괴했지만 대중에게 쓰라린 환멸을 안겨 준 억압과 뇌물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조선일보>조차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석 달 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했다. 게다가 이 지역 소열강들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갈등은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피 맛을 본 매들

피 맛을 본 매들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날개짓을 하고 있다. 피에 굶주린 전쟁광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성공에 고무된 듯하다. 한 외교 논평가는 이렇게 지적했다. “승리는 모든 것을 바꾼다. 무엇보다 심리를 바꾸어 놓는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심리는 미국의 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다.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할 때다.” 부시와 도널드 럼즈펠드와 폴 울포위츠는 정확히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 한다. 부시는 “테

러와의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비행기들이 아프리카 동부의 소말리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군함이 소말리아 해안에 배치되고 미국 정보원들이 내륙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소말리아는 이미 완전히 유린된 나라다. 소말리아는 가난으로 따지면 아프가니스탄과 쌍벽을 이루는 나라다. 지난 10년 동안 소말리아에는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슬람 단체들이 권력의 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소말리아 부족 원로들은 압둘카심 살라트 핫산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국토의 절반만을 통치하고 있다. 핫산은 여러 해 동안 소말리아를 분할 지배해 온 세력들의 반대 에 직면해 있다. 이들 반대 세력 가운데 후세인 아이디드가 있다. 후세인 아이디드는 1992년 소말리아 주둔 미국 군대에 굴욕감을 안겨 준 파라 아이디드 장군의 아들이다. 후세인 아이디드는 미국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고 미국 특공 부대의 장교 과정을 이수했다. 최근에 미국 관리들은 파라 아이디드에 대한 치욕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후세인을 만났다. 집중팔구 상호 협력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한편, 친미 에티오피아 정부가 소말리아를 상대로 하는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

9월 11일 테러 직후,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의 이슬람 단체인 알 이티하드가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장래의 전쟁을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소말리아 공격의 진정한 동기는 7년 전의 “악몽을 떨쳐 버리는 것”이다. 7년 전, 44명의 미군들이 소말리아에서 살해당하면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소말리아에서 철수해야 했다.

복수, 베트남 중후군 극복, 미국의 세계 지배 재천명이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래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미래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미국의 관심은 새로운 공격 대상을 찾아내 폭격하고 북부동맹 같은 학살자들을 후원하는 것

이다.

인도네시아의 아체도 미국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공격 대상 가운데 하나다. 분리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체인들은 친미 인도네시아 국가에 의해 억압당하고 있다. 필리핀의 무슬림 반군들(예컨대, 아부 사야프 등)도 표적이다. 그들은 100년 전에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에 저항했고, 1980년대에는 친미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항했다. 지금도 친미 필리핀 정부와 싸우고 있다.

또, 예멘이 있다. 예멘을 공격하려는 이유는 지난해 예멘의 아덴항에서 이슬람 조직이 미국 군함 USS 콜을 폭파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매복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과 파라과이 국경 지대에서 군사 작전을 벌이겠다고 협박한다. 이 지역에는 산유국 베네수엘라가 있다. 미국은 심지어 유엔 보호령인 보스니아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다. 럼즈펠드는 9월 11일 자살 테러범들과 이라크 사이에 “연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럼즈펠드는 1991년 걸프 전쟁 때 이라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라크는 전쟁과 경제 봉쇄로 황폐해졌다. 미국 지배자들은 11년 동안 이라크를 폭격했다. 1991년 걸프 전쟁 이래 미국의 경제 체제로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조만간 유엔 안보리는 이라크 경제 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사담 후세인이 유엔 무기사찰단(사실상 미국의 스파이들)의 입국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전쟁을 위한 구실이 될 수도 있다.

격화되는 팔레스타인 사태

미국의 전쟁은 중동 정치의 가장 심각한 모순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한층 격렬하게 만들고 있다. 9월 11일 이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가혹하게 공격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내내 미국은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테러 통치를 용인했다. 9월 11일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1백50명이 넘는 팔

레스타인인들을 살해했다. 그리고 1993년 평화 협정 이래 가장 거대한 군사 침공을 감행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무역센터 테러 발생 일주일 만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을 스무 번이나 침공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네셔널)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인 사망률은 9월 11일 이후 두 배나 높아졌다.

부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대한 지지 움직임을 중동 전체를 불안정에 빠뜨릴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12월 초 야세르 아라파트의 회담요청을 쌀쌀맞게 거절했다.

조지 부시는 아리엘 샤론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철수하라고 부드럽게 타일렀을 뿐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를 늘렸다. 10월 24일에 이스라엘 군대가 베이트 잘라를 포위하고 민가들을 포격했을 때, 미국 상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27억 6천만 달러의 지원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20억 4천만 달러는 “특별 군사 원조”였다. 미국의 군사 원조 덕분에 아리엘 샤론은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테러 통치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거대한 유전 지대인 중동에서 여전히 미국의 경비견 노릇을 하고 있다.

미국은 무적인가?

탈레반이 항복한 뒤, 많은 사람들이 군사력을 앞세운 미국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미국이 너무 강력해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자기 이익을 세계에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다.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3분의 1을 넘는다.

그러나 미국의 오만방자함은 전 세계에서 비통함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반감에 직면해 부시는 군사 행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에 대한 더한층의 뿌리 깊은 증오를 낳을 것이

다. 군사 행동은 탈레반처럼 대중 지지가 취약한 세력을 파괴하는 데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대중적 저항 운동과 대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30년 전 베트남 반전 운동은 오늘날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던져 준다.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대중 운동은 미국 지배 계급을 흔들어 놓았다. 1970년 11월 노동 계급 도시인 디트로이트 국민 투표에서 63퍼센트가 전쟁에 반대했다. 대중적 반전 운동은 인종 차별과 빈곤에 반대하는 흑인 항쟁을 고무했고, 이 투쟁은 강제 징집에 반대하는 백인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반전 운동은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군인들의 마약 복용이 늘어났다. 군인들은 때로 수류탄으로 강경파 지휘관들을 죽이기도 했다. 군대는 완전히 사기저하됐고 미국 지배 계급은 분열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경영자들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불평했다. 시위는 단지 규모만이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했는데, 시위대는 미국 제국주의 반대라는 슬로건을 공공연하게 제기했다. 결국 너스너는 종전을 선언해야 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를 물리쳤다.

오늘날 부시의 전쟁에 반대하는 항쟁들은 베트남 전쟁 초기보다 훨씬 거대하다. 지금은 30년 전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운동을 건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12월에 영국과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각각 10만 명이 모여 반전 행진을 했다. 중동에서 일고 있는 대중적 반전 무드 때문에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정권은 국내의 반란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한 반감이 존재한다. 이 체제는 지난 사반세기 동안 네 번이나 침체에 빠졌는데 그 결과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분노는 사장들이 벌이는 일자리 공격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연결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은 해방됐는가?

정권의

기성 언론은 미국의 전쟁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킴으로써 아프간 여성이 해방됐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탈레반이 카불에서 퇴각한 뒤 언론들은 일제히 부르카를 벗는 아프간 여성의 모습을 크게 부각시켰다.

로라 부시와 세리 블레어는 자기 남편들이 벌이는 전쟁의 동기가 여성 해방이라고 고결한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로라 부시는 라디오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거둔 많은 군사적 성공 때문에, 여성들은 더 이상 가정에 감금되지 않게 됐다.” “그들은 처벌의 두려움 없이 음악을 듣고 자신의 딸을 가르칠 수 있다. … 테러리즘에 맞선 투쟁은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카불에서 미국의 “승리” 뒤에 찾아온 것은 결코 해방이 아니었다.

한 목격자는 미군 폭격기가 카불의 비비 마흐루 지역에서 2백30킬로그램의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굴 아흐마드는 희생자들 가운데 단지 한 명일 뿐이다. 카펫 제조공인 그의 아내 시마와 아들, 다섯 명의 딸들이 모두 폭격으로 숨졌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묘지에 묻었어요. 우리는 그들 무덤 위에 각각 비석을 세웠지만 그들의 몸뚱이는 모두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어요.” 아흐마드의 첫번째 아내 아라파의 말이다.

이렇게 미군의 폭격과 집중탄으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은 여성들의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데도 기성 언론은 아프간 여성이 부르카를 벗고 립스틱을 바르고 하이힐을 신게 됐다고 보도했다.

카불과 여타 도시의 많은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 또한 크다. 부르카를 벗는 여성은 아직 소수다. <업저버>의 크리스 스티븐 기자는 외국 사진 기자들이 여성들이 부르카를 벗는 대가로 돈을 줬는데 여성들은 사진을 찍고 나면 곧바로 다시 부르카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많은 여성들은 북부동맹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1992~1996년 동안 자행한 학살·강간·약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 권력을 장악한 탈레반이 여성을 가혹하게 억압한다는 사실을 무시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북부동맹의 야만적 전력 역시 무시하고 있다.

미국이 여성 해방을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에겐 아주 놀라운 일일 것이다. 친미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은 탈레반 치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몸을 가리고 공공 활동이 제한된다. 탈레반의 종교 경찰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통치스타일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뿌리 깊은

기성 언론은 마치 아프가니스탄 여성 억압이 새로운 발견인 양 호들갑을 떨지만,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받아 온 고통은 탈레반이 통치한 5년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끔찍하게 억압해 온 많은 관습들과 탈레반은 수십 년에 걸친 전쟁과 경제 후퇴의 산물이다. 서방은 내전에서 여러 군벌들을 지원해 아프가니스탄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 가담했고 이번의 대규모 전쟁을 통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래서 특히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다.

탈레반의 억압적 여성 정책은 “정통 이슬람”에 충실한 결과가 아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의 첫번째 아내인 카디자는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가졌던 부유한 상인이었고 그녀의 딸 파티마는 이슬람에서 대단히 존경받았다.

7세기에 무함마드는 남녀 간의 관계를 포함해 사회 활동을 다스리는 규범을 세웠다. 그것은 그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도전했던 지배 부족들이 여성과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전제적으로 억압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이웃한 기독교 제국인 비잔티움에서 여성을 다루던 방식보다 나왔다. 무함마드의 규범은 오늘날 전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 대중이 획득한 제한된 자유와 평등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여성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격하시키지는 않았다.

오늘날 이슬람 국가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지위는 다르다. 이란 여성은 차별당하고 공공 장소에서 머리에 베일을 써야 하지만, 그들은 일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고 국회 의원이 되기도 한다. 이란 정부는 1996년에 탈레반의 여성 정책을 혹평했는데, 당시 카불의 이 새로운 통치자를 후원하고 있었던 세력은 바로 미국이었다.

모든 운동과 마찬가지로 탈레반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낳은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 탈레반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전쟁이 없었더라면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전쟁으로 약 2백만 명이 죽었다. 탈레반의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재정을 지원한 파키스탄 난민촌 내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를 다녔던 어린 고아들이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화

지 않은 채 유지돼온 촌락 출신들이었다.

중앙 아시아 전문가인 아메드 라시드는 최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뛰어난 책 《탈레반》에서 이렇게 썼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모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수적이고 거의 문맹인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 남부 지방 출신이다. 탈레반 지도자 몰라 오마르의 마을은 여성들이 항상 전신을 덮은 채 돌아다녔고 학교에 가는 소녀는 한 명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러한 마을 출신 소년들을 난민촌으로 내몰았다. 남성들만 다니는 마드라사에서 그들은 자기 마을의 전통과 종교적 가르침을 겨우 깨우칠 수 있었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토를 서로 차지하려 애쓰는 경쟁 군벌들은 1994년에 권력을 잡았지만, 혼란만 가져왔다. 무장한 깡패들이 사람들을 잔혹하게 처벌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돈을 끌어모았다. 그래서 1996년 탈레반의 권력 장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의 혼란과 대학살,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돼 온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대안으로 보였다.

라시드는 이렇게 쓴다. “20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 아프가니스탄 시민 사회를 파괴했고, 가혹한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중요한 인식적 구실을 했던 씨족 공동체와 가족 구조도 파괴했다.” 탈레반은 자신의 규범을 강요하는 게 나라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탈레반이 강요했던 것 중에는 부르카나 여성의 공공 활동 금지는 물론 남성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있었다. 라시드는 이렇게 쓴다. “오마르와 그의 동료들은 그들 자신의 환경, 여성에 대한 그들의 경험 또는 경험 부족을 사회 전체로 옮겨다 놓았다.” 그들은 정제된 시골 사회의 전통이 산산조각난 나라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직접적인 동기가 있었다. 1990년대 초에 도시들을 장악한 북부동맹 전사들은 성인 여성과 소녀들을 강간했다. 이러한 강간은 현대 전쟁의 끔찍한 특징 가운데 하나

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부 전선의 야만성에 자극받은 소련 군대는 1945년 베를린에 입성할 때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집단강간을 자행했다. 탈레반 지도자들은 자신의 군대가 북부동맹처럼 행동할까 봐 두려워했다. 1990년대 아프가니스탄의 야만성은 이것을 피하려는 다른 야만적인 방식—여성에 대한 가장 엄격한 제약—을 낳았다.

이것이 탈레반의 여성 정책에 대한 변명이나 정당화가 될 수는 없지만,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탈레반의 여성 정책은 탈레반을 낳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과 분리될 수 없다.

여성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 전쟁만큼 여성 해방의 구호가 더럽혀진 적도 없을 것이다. 부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폭격하기 위해 탈레반의 여성 억압을 구실삼았다. 미국의 주류 페미니스트들(상당수 우리 나라 페미니스트들 포함해)의 전쟁 지지 노력은 서방의 위선에 날개를 달아 주었다.

탈레반의 카불 퇴각 이후 언론이 퍼뜨린 ‘해방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수전 조지 같은 저명한 반전·반자본주의 활동가조차 혼란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성 해방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서방의 거짓말에 조금도 흔들려선 안 된다. 그 동안 미국이 개입해 온 전쟁에서 여성들이 당한 야만적 대우를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들은 “이중 베테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미군들이 민간인 여성을 죽이기 전에 강간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었다. 1968년 미라이 학살로 죽은 사람은 적어도 4백 명이었는데,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이었다. 이들은 집단 강간당한 뒤 학살당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조건이 선진국 여성들이나 우리 나라 여성들보다는 못하지만, 제국주의의 개입이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삶을 개선할 수는 결코 없다.

여성 해방이나 다른 진정한 사회 변화는 위로부터 도입될 수 없다. “위로부터의 해방”은 가장 좋은 상황에서조차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을 더욱 나쁘게 하는 방식으로 시도된다면 그것은 끔찍한 재앙을 낳는다.

이것이 1970년대 말 소련이 후원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시도했던 방식이다. 그 결과 무자헤딘을 낳았던 일련의 반란이 일어났다. 1979년 소련의 침공에 맞서 처음으로 저항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해방은 무엇보다 거대한 물질적 진보를 이룩하고 가난한 여성 대중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을 황폐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모든 열강들이 해 온 것과는 정반대다.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다음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지금, 어떻게 해방을 말할 수 있겠는가?

- 10만 명 가운데 1천7백 명의 여성들이 출산 도중 사망한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 어떤 피임 도구도 없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8명의 아이를 낳는다. 이 가운데 2명은 다섯 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 여성의 평균 수명은 약 45세다.

전쟁은 고통을 적어도 덜어줄 사회적 유대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일부 여성이 부르카를 벗고 다닌다면 여성은 해방된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좀더 평등한 관계는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고 경쟁 군벌들이 영토를 분할하는 사회에서 이뤄질 수 없다. 평등한 남녀 관계는 외부 세력이 위로부터 강요하는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관계는 오직 아래로부터의 자유로운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김덕업

이번 정기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 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에도 부딪히자 법안을 손질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법안은 또 한 차례 수정됐다.

테러 개념에 관한 수정 법안에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라는 구절이 삭제됐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은 뚜렷한 구별이 어렵고 '정치적 목적' 없는 집회나 시위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테러의 개념은 모호하다.

또한 수정 법안은 국정원이 진두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려고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국정원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던 것을 국무총리가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수사권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어차피 테러 관련 수사를 하는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수사권 삭제는 눈속임일 뿐이다. 아무리 법안을 성형 수술한다 해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 될 것은 분명하다.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살해한 사건을 '여간첩 사건'으로 조작·은폐한 '수지 김 사건'을 만든 곳이다. 줄지에 빨갱이 굴레를 쓴 김옥분 씨의 가정은 풍비박산났다.

또한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1973년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최종길 교수가 중앙

정보부 직원에 의해 살해됐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자살이라고 꾸며 냈다.

여러 나라의 정부들도 테러방지법과 일맥 상통하는 반테러법을 제정하고 있다. 각국의 인권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전 세계적 규모의 '공안 정국'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운동

언론은 9월 11일 테러 때문에 반테러법이 제정돼야 하는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테러가 있기 전부터 각국 정부와 보수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공격하는 법을 준비해 왔다.

지난 7월 체코반자본주의 시위 이후 유럽의 정부들은 '테러 대처'를 핑계 삼아 경찰권을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시민을 감시·도청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세계의 지배자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걸림돌인 반자본주의 운동을 공격하기 위해 '테러' 정국을 이용한다. 이미 영국 정부는 급진적 반자본주의 활동가들을 '테러리즘 법 2000'에 의해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반세계화 운동은 테러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탈리아 극우 정당인 북부동맹은 반자본주의 운동 조직이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조직의 잠재적인 세포"라고 말하며 좌파를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다.

반테러법은 반전 운동과 반자본주의 운동을 겨냥한 반민주법이다.

미국 정부는 10월 26일 도청·감청을 확대하고 테러 활동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기소·추방하기 전까지 구금할 수 있는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반테러법은 소수의 테러리스트만을 겨냥한 법이 아니다. 조지 W 부시는 이미 9월

11일 이후 1천여 명의 사람들을 구금했다. 미국 정부는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수사당국은 테러법 섹출 수사를 제3국 출신 이민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지 W 부시는 이들을 군사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보험회사의 회장을 체포했는데, 그가 테러리스트 용의자와 성(姓)이 같았기 때문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좌파와 소수 민족 세력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 족과 티벳 족을 탄압하면서 '이들의 분리 독립을 막는 것은 세계적인 반 테러 전쟁의 일부'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들을 모두 알 카에다와 연관이 있다며 마구 잡아들였다.

인도 집권당은 1995년 폐기된 테러분열법을 한층 강화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한다. 인도 정부는 테러분열법을 내세워 지난 10년 간 무려 7만 5천여 명을 체포했다.

이렇듯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테러방지법은 우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우리의 자유를 공격하는 법이다.

이미 30년 전 영국 보수당 정부는 반테러법을 제정했다. 보수당 정부는 1971년 8월에 3백42명의 아일랜드 가톨릭 신자들을 '테러리스트이거나 IRA 조직원'으로 몰아 체포·감금했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 노동조합원, 비폭력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 평범한 가톨릭 신자들이었다. 정작 1960년대 중반부터 자행된 가톨릭 신자 학살에 책임이 있는 왕당파 당원들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영국 정부는 비무장한 시위대 14명을 죽였다.

김대중이 제정하고 싶어하는 테러방지법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으므로 북아일랜드의 반테러법을 능가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 반전·반자본주의 활동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들을 '테러리스트'로 모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보신탕을 먹는 게 인종 차별이라구?

이정구

최근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FFA는 한국인이 개고기를 먹는 데 항의하는 수천 통의 편지를 접수했다”며, “이 문제는 내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 올림픽을 치렀던 1988년에도 서구의 동물 권리론자들이 한국인의 개고기 식용을 비난한 바 있다.

개고기 식용을 앞장 서서 비난하는 인물은 유명 여배우 출신인 브리짓 바르도다. 그녀는 프랑스 나찌인 장 마르 르펜의 지지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책 《플루토의 광장》에서 “이슬람 교도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조국 프랑스가 인구 과잉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던 극우 인종주의자다.

역겹게도, 그녀는 “한국인들이 개를 애완동물과 식용으로 나누는 것은 백인과 흑인을 가르듯 인종 차별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그녀는 “인종 차별과 증오, 인종 간 폭력”을 조장한 혐의로 벌금 2만 프랑을 선고받았다. 또, 1996년에는 외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기소되기도 했다.

물론 많은 프랑스인들은 브리짓 바르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을 밝힌 많은 프랑스인들은 자신이 개고기를 먹어 본 적은 없지만 개고기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프랑스인들이 달팽이 요리, 푸아그라(거위의 부은 간을 요리한 것)를 먹듯이 일부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이것은 음식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 줄 뿐이다. 1988년과는 달리 이번 개고기 논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레마이네 차이퉁>은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비롯한 국제 스포츠계가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음식 관습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FIFA가 프랑스인들에게 말고기, 달팽이, 개구리 뒷다리 요리를 먹지 못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물의 권리?

개고기 식용을 비난하는 것은 문화적 다양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적 편견에 가깝다. 그런데 개고기 논란의 이면에는 개를 포함해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동물 권리론자들의 주장이 깔려 있다.

우리는 동물을 가혹하게 학대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나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동물 권리론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감각이 있을 뿐 아니라 뇌를 가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흑인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동물에게만 임상 실험을 하고 인간에게는 하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동물만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동물 차별”이라고까지 말한다.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이런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인간과 여타 동물 사이의 차이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물론 인간의 신체에서 나타나는 생물학적·생리학적 과정이 동물의 신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주된 차이는 인간은 용량이 크고 발달한 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노동 덕분에 인간은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도구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으며, 그 결과 사회 조직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인간에게는 변동하는 역사가 있지만 동물에게는 단순한 반복일 뿐인 과거만이 있을 따름이다. 브리짓 바르도는 “개는 오리나 거위

극우 인종주의자
브리짓 바르도

보다 사람과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간과 여타 동물들 사이의 차이가 훨씬 더 근본적이며 개는 인간보다는 오히려 오리나 거위에 더 가깝다.

둘째, 동물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고기 식용에 반대한다면 이런 주장은 어디까지 나아갈까? 브리짓 바르도는 “소는 식용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소도 감각을 갖고 있고 뇌를 가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러면 서양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참새우는 어떤가? 인간과 친하다는 이유로 고양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면 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어느 동물까지 그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하는가? 이 점에서 사실상 특정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위선에 가깝다.

더욱이 자연 세계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한다. 고양이가 쥐를 잡거나 사자가 물소를 공격하는 일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런’ 모습이다. 그런데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오로지 인간만이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악한 존재인 듯이 말한다.

약육강식

셋째,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이 “권리”라는 말을 쓸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다.

역사에서 피억압자들(흑인,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 등)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억압에 반대해 싸웠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백인,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 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지는 않았다. 역사적으로 권리라는 단어는 정치적·사회적 투쟁의 맥락에서 쓰여졌다. 따라서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이 “고양이, 개, 원숭이는 권리를 갖고 있어”라고 말할 때, 그 권리는 동물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의 문제가 존재한다.

인류가 이룩한 과학 발전과 의학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실험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침팬지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인류의 삶을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은 인류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꼴이다. 그러면 인간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동물의 권리를 옹호해야 할 만큼 동물이 인류에 비해 특별한 존재인가?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내에는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혼재돼 있다. 그렇지만 많은 극우 집단들이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동물 권리 운동의 역사는 매우 역겨운 일들로 점철돼 있다. 동물 권리 운동은 동물 도살 방식을 두고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을 공격한 역사도 갖고 있다. 그리고 1930년대 나찌 독일에서만 동물에 대한 실험을 금지했다. 대신 나찌 독일은 인간 생체 실험을 했다.

우리에 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필요하듯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도덕적·정치적·사회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동물 권리 옹호론자들이나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인간보다 개나 침팬지 또는 고래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동물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 

희망인가 타락인가?

안진영

1818년 인간에 의한 인간 창조를 다룬 최초의 공상 과학 소설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출판된 이후 복제 인간을 주제로 한 수많은 공상 과학 소설과 영화가 만들어졌다. 최근의 <X-파일>, <블레이드 러너>, <6번째 날> 등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복제 인간’들은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그레고리 E 펜스는 최근 국내에 출판된 그의 책 《누가 인간 복제를 두려워하는가》(양문)에서 공상 과학물이 떠뜨린 다음 같은 엉뚱한 상상들을 꼬집었다.

첫째, 독재자가 가장먼저 복제 대상이 될 것이다.

둘째, 복제 인간은 성숙할 때까지 비인간적인 인공 자궁 안에서 자랄 것이다.(그런 건 없다. 있다면 수많은 미숙아와 중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제 인간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길어야 며칠이다.(인간은 아직 풀 한 포기도 빨리 자라게 하지 못한다.)

넷째, 성체가 된 복제 인간은 감정 없는 살인마가 되거나 뇌전엽 절제술을 받은 장애인인 될 것이다.(그렇게 할 지식도 기술도 없다.)

다섯째, 복제 인간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환경에서 공산품처럼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결코 하나의 독자적인 개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복제된 여성은 키가 크며 날씬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일곱째, 만약 선풍한 남녀가 우연히 복제된다 할지라도 그 복제 인간은 악마가 될 것이다.

여덟째, 포유류를 복제한 과학자는 언제나 자신의 실험실에서 자신이 복제한 생물한테 살해당할 것이다.

《노동의 종말》과 《소유의 종말》을 쓴 제레미 리프킨은 1977년 첫 시험관 아기인 루이스 브라운이 성공적으로 임신됐을 때 이 아기가 심리적으로 ‘괴물’ 같을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는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번엔 인간 배아복제를 비난했다.

“인간 복제란 누군가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다. 우리는 지금 품질 관리와 같은 산업적 구상의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레미 리프킨이 두려워한 “프랑켄슈타인의 아가들”을 우리 머리에서 지워야만 인간 복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상황이

2001년 11월 25일 미국의 생명공학 벤처 기업 ACT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²⁾ 복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조지 W 부시는 위선적이게도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파괴하기 위한 생명을 키워서는 안 된다.” 부시는 그 순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었다.

1천5백 년 동안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에 따라 성행위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가톨릭은 모순되게도 ‘정상적인 생식’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9개국 정부가 배아 줄기세포³⁾와 인간

인간배아복제를 이용한 치료 개념도

1 기증자의 난자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한 핵 이식



2 인간배아복제 후 줄기세포 배양



3 원하는 방향으로 분화



4 환자에게 이식



배아 연구를 금지했다. 미국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인간 배아 복제 금지법이 상원에 계류중이다. 영국 정부는 인간 배아 복제에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법안을 처리중이다.

유네스코도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국내 시민단체들은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며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대부분 무지와 보수적 편견에서 비롯한다. 일부 과학자와 윤리학자 등이 이런 편견을 부추긴다. 유전자 결정론이 가장대표적인 예다.

사람들은 ‘복제’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똑같은 생김새에 말과 행동이 모두 일치하는 복제 인간 군대를 상상한다. 어느 날 자기 앞에 나타날 또 다른 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인간 배아 복제와 쌍둥이 가운데 유전적으로 더 동질한 것은 오히려 쌍둥이이다. 게다가 쌍둥이는 같은 시기에 같은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나 같은 환경에서 거의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란다. 그러나 수많은 쌍둥이들을 복제 인간 군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최초의 삼 쌍둥이인 앵과 창은 뚜렷하게 다른 개성을 보였다. 그들은 태어날 때 간도 공유하고 있었지만 한 명은 까다롭고 술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인자하고 쾌활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아내가 있었다.”

유전자 결정론은 유전자만 그대로 복제하면 똑같은 인

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유전자에는 인간의 감정·경험·기억이 들어 있지 않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그래서 동물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징들은 유전자에 없다.

“인류의 문명은 유전 정보의 전달보다는 비유전적인 방법에, 즉 기본적인 교육을 통한 수학 문제의 해결 능력과 읽기 능력의 전달, 책이나 컴퓨터를 통한 이전 세대 지식의 전달, 식량 생산 방법의 전달,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의 전달 등에 더 크게 의존해 왔다.”

미끄러운 경사면

안락사나 낙태 논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배아 복제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보수주의자들과 종교계는 ‘미끄러운 경사면’ 논리를 들이댄다. 인류가 새로운 시도에 맞닥뜨렸을 때 그리하여 이전 사회에서 불가능했던 것(혹은 금기시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때마다 이들은 경고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렸다.” “이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거야.” “한번 허용하면 그 뒤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거야.”

이들은 암암리에 인간 배아를 복제하는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나쁜 동기를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또, 억압돼 있던 나쁜 인간 본성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모조리 분출될 거라고 가정한다. 그들에게는 인간 본성이 고정불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유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유전자에 손을 대는 것을 인간 본성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해서는 안 된다.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인류의 타락’과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13년 간 약 2만 명의 미국 어린이들이 이 기술을 통해 태어났고 그들은 전혀 “괴물”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를 놀리면서 ‘너 같은 똥똥보를 어떻게 시험관에 넣었을까?’ 하고 물었을 뿐이에요.”(루이스 브라운)

1960년대에 태아에게 다운증후군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양수 검사가 가능하게 되자 보수주의자들과 종교계는 완벽한 아기만을 ‘선별’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이유로 양수 검사의 금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 이 검사로 ‘완벽한 아기’가 선별됐다는 소식은 없다. 오히려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 여전히 많은 산모들은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돌리

줄기세포는 의학의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분화를 위해 배양기에 들어 있는 줄기세포들 (왼쪽)
 잉여배아를 사용한 줄기세포는 윤리적 논쟁을 야기한다. 배아 줄기세포의 마이크로 현미경 이미지 (오른쪽)

인간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기술이 너무 불완전하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과학자 이언 윌머트가 복제 양 ‘돌리’ 한 마리를 얻기 위해 2백 44번의 시도를 한 것과 복제 동물의 기형, 조기 사망 등이 이런 위험의 근거로 제시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의 임신과 출산도 이와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는다.

1억 개의 정자 중 단 1마리가 정해진 12시간 안에 난자와 수정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수정된 수정란의 45퍼센트는 임신 사실을 알기도 전에 유산된다. 또 다른 15퍼센트는 뚜렷한 원인 없이 9개월 간 엄마의 뱃속에 있지 못하고 유산된다. 전체의 25퍼센트는 산모와 태아의 이러저러한 질병으로 유산된다.

인공 유산이 없다고 가정해도 전체 수정란의 25퍼센트만이 출산에 성공하지만, 이 가운데 2~3퍼센트는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유전적 이상은 이보다 훨씬 많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기의 상당수는 질병과 사고로 조기 사망한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임신과 출산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근거로 인간의 임신과 출산을 반대하지 않는다.

자궁의 역할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간 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다. 복제된 인간 배아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살과 피를 가진 여성이 9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배아를 키워 출산해야 한다. 공산품 짝어 내듯이 “산업적 구상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미래

이언 윌머트가 복제 양 ‘돌리’를 만들어 낸 것이나 ACT사가 인간 배아를 복제해 낸 것은 상당히 커다란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 배아 복제의 성공으로 세포나 유전자 단계에서 생물학적 치료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은 복제 인간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전병을 가진 아기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암 환자에게, 임신 3개월이 돼서야 아이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산모에게, 불임 여성을 비롯한 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것이다.

미래의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인류의 타락’과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까? 

- 1)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이 마비되고 각종 감각이 둔해진다. 성격이 난폭해지는 변화를 겪기도 한다.
- 2) 배아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후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하는 기간에 있는 아기를 말한다. 수정 후 착상 때까지를 수정란, 그 후 2개월까지를 배아, 이후는 태아라고 부른다.
- 3) 줄기세포를 얻는 것이 최근 인간 배아 복제 연구의 가장 주요한 목표다. 성장한 인간의 세포는 최초의 세포인 수정란과는 달리 각기 특수한 기능이 부여된 세포로만 성장하도록 유전자의 일부에 자물쇠가 채워진다. 그러나 어른의 골수에는 여전히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능력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가 남아 있고 몸의 각 기관이 만들어지기 전의 배아의 세포는 대부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줄기세포는 제한된 능력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유전자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이다.

백색 공포?

조승희

마약 복용이 늘고 있다. 1996년 6천1백 89명이던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1만 3백 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마약 복용자들의 규모는 그 20배인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최근 마약 복용 증가를 핑계로 마약 수사관에도 총기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이 조장하는 ‘마약 공포’는 황수정 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마약마다 복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필로폰(히로뽕) 복용자들을 가장 강력하게 단속한다. 검찰청 마약과가 그리는 필로폰 복용자들의 그림은 이렇다. 주사 바늘 자국이 가득한 팔뚝에 대용량 주사기가 꽂힌 채 죽어 가는 끔찍한 모습... 그러나 필로폰 복용에는 실제로 어떤 위험이 따를까? 영국 보건부 의사들은 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다.

“암페타민[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흥분제는 심리적 의존 현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심각한 금단 현상이 뒤따르지는 않는다. ... 암페타민 사용자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필로폰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다. 따라서 필로폰을 장기간 복용하면 약을 끊은 뒤에 심각한 우울증이 뒤따른다. 필로폰을 과다 복용했을 때는 헤로인 복용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생겨날 수도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로인(아편 추출물)이 가장 ‘위험한 마약’이다. 헤로인은 감각을 마비시키는 진통제이다. 아편보다 30~40배 더 강력한 헤로인은 알려진 것처럼 즉시 중독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헤로인

에 대한 의존성이 생겨나는 데는 몇 주가 걸린다. 그러나 복용자들은 대개 처음에는 그것이 헤로인일 줄 모르며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모른다.

에초에 헤로인은 모르핀 중독 치료제로 개발됐다. 아편 추출물인 모르핀은 1800년대부터 진통제나 마취제로 생산됐다. 모르핀은 전투 중에 부상의 고통을 잊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병사들에게 지급됐다. 그래서 모르핀 중독을 흔히 ‘병사들의 병’이라고 불렀다.

1898년에 독일 제약 회사 바이엘 사는 모르핀보다 열 배나 강력하고 중독성이 심한 ‘상용 다이아세틸 모르핀’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12개국 언어로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제품명은 독일어 ‘영웅’에서 딴 헤로인이었다.

계급

중독성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중독성 마약이라도 제한된 양으로 복용할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의사들의 헤로인 처방은 불법화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헤로인 중독자들에게 메사돈을 처방하는데, 메사돈의 중독성이 너무 강해 의사들이 걱정량을 가늠할 수 없어 종종 환자들을 죽게 만들기도 한다. 메사돈은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더 강하다.

마약 문제에 대한 의학적인 접근은 배제한 채 처벌 중심이다 보니 헤로인 복용으로 인한 위험이 오히려 증가했다. 거리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순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순도가 갑자기 변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에 대한 지배자들의 히스테리는 마약 치료 및 재활 센터에 대

한 지원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중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다른 모든 마약과 마찬가지로, 헤로인 또한 소비하는 계급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르다. 노동 계급 소비자들은 불순물이 포함되고 순도가 천차만별인 헤로인을 복용하는 반면, 부자들은 고품질 헤로인을 구입할 수 있으며 헤로인을 처방할 수 있는 소수 의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코카인 복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상당수 부유한 사람들은 그다지 건강을 해치지 않고 코카인을 복용한다. 그러나 코카인과 수산화탄소 나트륨의 결합물인 싸구려 크랙 코카인이 미국의 노동계급 시장을 공략하면서 위험이 증폭되었다. 미국에서 크랙 복용자가 늘면서 1988년 한 해 동안 애틀란타·워싱턴·피닉스 등지에서 코카인 관련 사망률이 갑절로 증가했다.

한편, 마약은 인종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도 이용됐다. 미국 지배자들은 흑인들의 크랙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또, 1993년에 코카인 가루를 흡입하는 자들은 평균 3개월 징역을 선고받은 반면 대부분 흑인인 크랙 흡연자들은 평균 3년을 선고받았다.

네덜란드

1967년 영국에서 64명의 유명인이 “마리화나[대마초]를 금지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비도덕적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내용의 광고를 <더 타임스>에 실었다. 그 뒤 35년이 흘렀지만 마리화나를 포함해 마약은 여전히 불법화돼 있다.

지배자들은 사람들이 일단 대마초에서 시작해 갈수록 좀더 독한 마약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짓말을 퍼뜨린다.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한 마약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심심풀이 삼아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꼭 독한 마약을 복용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1976년 네덜란드는 소위 아편법을 개정

해 소량의 대마 소지를 사실상 용인했다. 법 상으로는 제약 조항이 남아 있긴 해도 대마 가 적어도 범죄로 취급받지 않았다. 1온스 정도의 대마잎 판매는 주차 위반 같은 경범죄로 취급된다. 법 개정 뒤 암스테르담에는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이 4백 군대가 생겨 나기도 했다. “그 커피숍에서는 대마 연기에 둘러싸여 젊은이들이 수다를 떨고 늦은 저녁쯤 길길거리며 집에 돌아갔다. 술취한 십대들보다 덜 시끄럽고 덜 폭력적이었다.”

이런 개방적인 정책의 결과 독한 마약 소비가 급증한 것은 아니었다. 1987년에 암스테르담 성인의 경우 1.7퍼센트만이 코카인을 복용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미국의 6퍼센트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네덜란드의 헤로인 중독은 30퍼센트 가량 줄었다. 헤로인 중독자들은 무료로 주사기를 얻을 수 있어 에이즈에 감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낮다.

네덜란드의 통계는 흥미롭다. “담배로 1만 8천 명이 죽었고 알코올로 2천 명이 죽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가장 치명적인 마약인 헤로인으로 64명이 죽었다.”(<이코노미스트>, 1990년 1월 21일치.)

마약 복용을 범죄시하는 것은 음주를 금지하고 범죄시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을 가져온다. 술을 금지하고 범죄시하는 것은 마약과 마찬가지로 더 해로운 제품, 더 많은 부패, 폭력, 조직 범죄로 이어진다. 오늘날 술 생산과 공급을 범죄시하는 나라들에서 군대와 경찰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우리는 마약 복용자들과 거리의 판매자들, 오로지 생계를 위해 마약을 재배하는 농민들을 범죄시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마약의 범죄화는 대체로 불법 마약을 제조하

는 자본가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약 산업 내의 농민, 판매원, 복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든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약 시장의 확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마약 거물들의 활동은 더욱 강력하게 통제돼야 한다.

대부분의 ‘강한’ 마약 복용은 길거리에서 싸움질하는 것 정도의 ‘쾌감’만을 느끼게 할 뿐이다. 여전히 복용자들의 삶은 떠돌이만 하다. 그들의 자아도취와 쓸모 없고 의례적인 습관에 대한 집착은, 사람이 점점 멍청해진다는 것일 뿐이며 서글프고 가여운 것일 뿐이다.

분명 마약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삶의 절반이 술과 마약에 절은 채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필로폰이나 헤로인을 복용하면서 사회 변화가 될 수는 없다. 

마약을 위한 전쟁

서방 강대국들은 모두 마약을 위한 전쟁을 벌인 추악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영국은 130년 동안 동인도회사를 통해 중국의 아편 시장을 개척했다. 영국은 중국에게 아편 수입을 강요하기 위해 두 차례나 전쟁을 벌였다. 1860년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중국의 중독자는 자그마치 1천5백만 명에 이르렀다!

동남아시아의 식민 당국들이 사실상 아편 공급과 아편굴 허가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했다. 인도의 영국 통치자들은 총수입의 6분의 1을 아편 공급으로 충당했다. 아편은 대영 제국의 초석이었던 것이다.

1949년 중국 인민 해방군이 승리하자 세계에서 가장 큰 양귀비 농장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편 생산은 줄지 않았다. 프랑스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프랑스 비밀 정보 기관의 후원을 받아 아편 생산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됐다. 프랑스 비밀 정보 기관은 베트남의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1951년에 인도차이나의 아편 무역 - 황금 삼각 지대에서 생산된 - 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다.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패배한 뒤에는 미국이 이 지역의 아편 생산을 장악했다. CIA가 소유한 항공사가 양귀비 농장에서 나

온 아편을 정제소까지 실어 날랐다. 베트남에 있었던 한 CIA 요원은 나중에 자신이 “그 지역 아편 농작물을 모조리 사들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CIA는 라오스에서 좌익 게릴라 파렛 라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메오 언덕의 부족들을 용병으로 고용했다. CIA는 그들에게 모든 농경지를 아편 농장으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대가로 충분한 식량과 공산품 공급을 약속했다.

1979년 옛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CIA는 파키스탄 군대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헤딘을 지원했다. 무자헤딘은 아편 무역으로 전쟁 비용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군 장성들은 부자가 됐다.

미국 CIA가 남미에서 벌인 반공 전투는 코카인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요 코카인 생산 지역은 남미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페루와 볼리비아다. 코카인 가공은 콜롬비아에서 이뤄진다.

CIA는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니카라과의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면서 코카인 거래에 연루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콘트라 반군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용인했다. 마약 거래에 이용된 자금 세탁 회사와 항공사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

위선이기도 ‘마약 공포’를 조장하는 서방 지배자들이 바로 마약 생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긴 장본인이다.

월드컵, 스포츠, 자본주의

이수현

[편집자 주] 2002년 5월 31일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월드컵 경기가 시작된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월드컵 경기를 보며 열광한다. 이 글은 스포츠와 자본주의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또 그 때문에 스포츠는 거대한 사업이 됐다. 1995년에 미국의 스포츠 관련 산업의 규모는 연간 1천5백20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가 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식품 관련 산업보다 큰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규모도 12조 원에 이르며, 2010년이면 2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스포츠와 산업의 결합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다. 아주 오래 전 원시 시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됐다. 신체 활동은 노동 과정에서 분리되지 않은 일상 생활의 일부였다.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경쟁적인 스포츠는 존재하지 않았다. 경쟁적인 운동 경기는 소수 군사적·종교적 특권층이 농업 사회의 잉여 생산물을 지배하게 된 계급 사회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前)자본주의 사회에도 스포츠 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그 사회적 기능은 오늘날과 사뭇 달랐다. 기원전 776년에 시작됐다는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의 일부였다. 그 게임에는 여성과 외국인, 노예는 참가할 수 없었다. 현대 올림픽과는 달리, 관람이나 구경이 아니라 군사 훈련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권투, 레슬링, 투창 등 격투기 위주의 종목으로 시작된 것에서도 드러나듯이, 전사 양성이라는 군사적 목적이 더 분명했다.

농구와 배구처럼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창안된 스포츠도 있다. 농구는 겨울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배구는 농구보다 더 나이 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덜 격렬한 운동으로 개발됐다.

그러나 이런 운동들은 자본주의의 동학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스포츠 산업으로 발전하게 됐다.

제국주의

고대 중국과 일본, 그리스, 로마에도 축구와 비슷한 공놀이가 있었다. 각각 쉼쉬, 케마리, 하르파스톤, 하르파스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축구와는 달랐다. 그런 운동들은 전혀 경쟁적이지 않았고, 스포츠의 어원인 '유희'에 가까웠다.(스포츠는 '뛰놀다'를 뜻하는 동사 데스포르테(desporter)의 명사형 데스포르(desport)라는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축구는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발전했다. 당시는 19세기 초의 끔찍한 장시간 노동이 점차 사라지고 산업 생산이 안정기에 접어들 때라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숙련·반숙련 노동력이 필요했다. 주말과 휴일의 여가 시간과 대도시화는 대중 스포츠의 길을 열어 놓았다.

당시 축구 팀 가운데 4분의 1은 도시의 노동자 주거 지역에서 성장하기 위해 애쓰던 교회들이 주도해 만들었다. 영국의 프로 축구 명문 아스날은 올리치의 병기 창고(아스날은 병기 창고라는 뜻이다)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뎀커서 앤 요크셔 철도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영국의 기술자, 군인, 공장 소유주, 선교사들은 세계 각지로 축구가 확산되는 데서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영국의 축구협회는 1863년, 럭비연맹은

1871년, 사이클연맹은 1878년, 육상연맹은 1880년에 각각 설립됐다. 이 시기는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이 세계 각지를 분할 점령해 나가던 바로 그 시기였다.

현대의 제국주의는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해외로 확장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자본가들의 영향력이 노동자들 사이에 더 깊이 뿌리내림으로써 국내 노동 계급을 제국주의 프로젝트에 동원할 수 있어야 했다. 제국주의는 민족주의와 인종 차별 사상을 이용해 노동자 대중을 자국의 지배 계급과 연결시킨다.

제국주의 나라들 안에서 스포츠는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구실을 했다. 예컨대 축구는 제1차세계대전 전에만 하더라도 상당히 취약했던 이탈리아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상징이 됐다. 프리드리히 안이 창안한 투르넨 체조는 나폴레옹 점령에 대항해 독일 민족을 단결시키고 훈련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체조 교사들은 제식 훈련, 분열 행진 등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조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또, 구베르탱 남작이 현대 올림픽을 제창하게 된 것도 1870~1871년의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한 데서 자국받은 것이었다. 그는 영국의 럭비 학교를 방문한 뒤에 영국식 스포츠 교육 체계를 프랑스에 이식하려 했고, 프랑스가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체육을 교육 제도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재 정권 치하의 스포츠는 그 사회적 역할이나 민족주의와의 연계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TV로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인 1936년의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치의 대규모 선전 공세는 절정에 달했다.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서둘러 프로야구를 출범시켰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스포츠 게임이 인류의 평화와 우애 증진에 기여하는 비정치적인 행사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20년에 영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내의 중립국이 패전국과 경기를 치른 것에

반발해 연맹을 탈퇴했다. 1930년 제1회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가 우루과이에 패배하자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성난 군중이 우루과이 영사관에 난입해 결국 두 나라사이의 외교 관계가 단절됐다.

1968년에 멕시코 정부는 올림픽이 돈 낭비라고 생각하는 젊은이 수백 명을 학살한 뒤에야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다. 1980년에 서방 국가들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면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다. 4년 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그 반대로 소련이 미국의 그레나다 침공에 항의해 보이콧했다. 1996년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은 뇌물 상납 스캔들로 얼룩진 대회였다.

소외

오늘날 수백만 명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 과정과 소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력이 사고 팔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장 · 광산 · 사무실 · 병원, 어디서든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에는 만족을 느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이 끝난 뒤, 오직 “자유 시간”에만 노동자들은 자기 존재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또 느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압도 다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바로 스포츠라고 생각한다. 경기장에서, 또는 TV를 통해 게임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해방감을 맛본다.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9회 말 2사 후 만루 홈런의 짜릿한 묘미를 스포츠에서는 맛볼 수 있다. 공장 · 광산 · 사무실 · 병원에서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는 거대한 장벽이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에서는 몇 번씩 무너지곤 한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나 팀,

국가와의 일체감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도 한다. 박찬호에 관한 것이라면 시시콜콜한 것까지 외우고 다니면서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나 한국 월드컵 대표팀의 승패에 일희일비하면서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라.

하지만 스포츠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데 불러모으으로써 저항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 리비아 경찰은 축구 경기장에 모인 군중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자 그들에게 발포했다. 프랑코 치하 스페인에서는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에 야유를 보내고 바르셀로나 팀을 응원하는 것이 정부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운동 선수들의 정치적 저항도 있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복식 경기(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딴 캐시어스 클레이(나중에 무함마드 알리로 개명함)는 미국에 돌아온 뒤 인종차별에 항의해 금메달을 강물에 던져 버렸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는 시상대에 오른 미국의 흑인 육상 선수 두 명이 미국 국가(國歌)가 연주되는 동안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높이 치켜들어 주먹을 쥐고 ‘블랙 파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축구 경기장에 모인 관중의 분노는 상대팀 선수나 응원단을 겨냥하기 십상이고, 욕설에 이어 폭력 사태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합리성”은 우리의 노동뿐 아니라 여가도 지배하고 계획함으로써, 우리의 개성을 보잘것없게 만든다.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말처럼,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락은 노동의 확장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은 스포츠 · 레저 산업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현대의 스포츠는 국가간 경쟁, 자본주의적 생산, 계급 관계라는 틀 속에 완전히 통합돼 있다. 언론 매체는 스포츠를 이용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공격적인 개인주의, 냉혹한 경쟁심, 엘리트주의, 맹목적 국수주의, 성차별 관념과 인종 차별 관념)를 설해 없이 퍼뜨린다.

스포츠의 위계 구조는 자본주의의 사회 구조, 경쟁적 선발과 승진 시스템을 반영한다. 성적, 경쟁, 기록으로 표현되는 스포츠의 추동력은 자본주의 생산의 추동력을 비춰 주는 거울이다.

존 하그리브스는 제2 스포츠가 현대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유순한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스포츠와 산업이 “고도의 전문화와 표준화, 관료적이고 위계적인 행정 기구, 장기적인 계획, 과학기술에 대한 의존 증대, 생산성 극대화,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소외”라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도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량 소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생산되고 포장되고 시장에서 판매된다.”

생산 관계를 끊임없이 변모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온갖 사회 관계도 변모시키는 자본주의는 스포츠도 자본의 논리에 맞게 변형시키고 그에 따른 갈등과 투쟁을 만들어 낸다.

진정한 유희로서의 스포츠, 경쟁 압력과 기록 갱신의 강박 관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스포츠는, 사람들이 노동 · 여가 · 자연에서 소외되지 않고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조에 기초한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의 “블랙 파워”

김대중, 선거, 진보 진영의 도전

김인식

끊임없는 부패 추문은 여권의 선거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이 대중의 환멸과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쇄신'을 시도하는 상황에서조차 비리의 사슬 고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부패 스캔들에는 핵심 권력 기관들(청와대, 검찰, 국정원, 경찰 등)이 연루돼 있다. 그만큼 김대중 정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집권당의 부패는 다가올 선거들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대중 교통, 의료,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악화가 추가될 것이다. 결정적으로, 대기업화와 정리해고가 낳은 노동 대중의 불만은 김대중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가망 없는 목표로 만들고 있다. 1997년에 노동 대중은 김대중 정부의 정권 장악에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금 한때 김대중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김대중과는 다른 진보적 또는 좌파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2년은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세력들에게 전장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실패와 인기 하락으로부터 반사 이익을 챙기려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0·25 재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대중의 경계 대상이 되는 모순된 처지에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나라당의 수구적 성격을 혐오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자민련도 또 다른 수구 정당이다.

모든 주요 우파 정당들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지지도 하락은 다름 아닌 현 정부의 친시장 정책에 대한 누적된 반감과 환멸의 결과다. 그런데 김대중의 친시장 정책은 다른 모든 우파 정당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책이다.

좌파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반감 정서와 저항분 위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선거 도전

은 이 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김대중 정부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노동조합 투사들, 민중 운동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단일 쟁점 운동가들, 수많은 평범한 노동자들이 앞으로 이 논쟁에 빨려들 것이다. 노동자 운동 내 주요한 논쟁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 정권과는 다른 대안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하는 점에 맞춰질 것이다.

이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사회 저변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정치적 급진화의 물결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좀더 직접적으로는, 1999년 말 위대한 시애틀 시위 이후 좌파들의 의제를 지배해 온 반자본주의 급진화 문제와 관련돼 있기도 하다. 워싱턴, 미요, 멜버른, 프라하, 예테보리(고텐부르크), 제노바, 브뤼셀로 이어진 반자본주의 시위는 현대 자본주의의 탐욕스러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반대했다. 김대중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도사를 자임했다. 따라서 평범한 사람들의 신자유주의 반대 정서는 불가피하게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옹호와 충돌을 빚게 된다.

그 동안 노동자 운동은 김대중 정부의 우선 순위에 도전했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2002년 두 차례 선거(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선거적 도전이라는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 투쟁과 선거

김대중 정부에 도전하는 데서 파업과 대규모 시위 같은 대중 투쟁이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투쟁을 통해 광범한 노동자 층이 정치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투쟁의 규모가 클수록 정치적 파급 효과와 영향 또한 심대하다. 그런 투쟁에 참가

했던 일부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대안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많은 노동자들은 투쟁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선거에 의존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모순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생겨난다.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은 사회적 생산의 기초다.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단 일주일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만큼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자본주의의 운명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경제적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생산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임금 수준, 노동 시간, 노동 형태, 노동 조건을 주로 고용주들이 결정한다. 고용주들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 시장의 변동에 직면해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여긴다. 즉,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 계급의 머리 속에 존재하는 모순된 의식의 근원이다. 그리하여 대중의 의식에는 사회를 변

화시킬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런 변화는 체제가 설정한 경제적·정치적 제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공존한다.

그 때문에 노동자 집단이나 한 노동자의 머리 속에서 대중 투쟁과 선거는 모순을 겪지 않고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 심지어 심대한 사회 변혁 시기에조차 대중은 여전히 선거를 주요한 사회 변화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한다. 1918년 러시아 제헌의회 선거와 1968년 프랑스 총선거처럼 말이다.

한편, 선거는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 결정적 장소는 아니지만 계급 투쟁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계급 이익의 충돌이 선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계급 투쟁이 벌어지는 (덜 중요한) 하나의 무대라 할 수 있다.

선거는 계급 세력 저울을 반영하는 축소판이기 때문에 선거는 사회 위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행동과 조직 형태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이 논쟁에 노동자들을 끌어들이어 노동 계급의 조직과 의식을 강화하는 데 선거를 얼마간 이용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치료하기 위해 선거에 기대는 한 우리는 선거에



적극 개입해 우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을 발견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쟁점들을 다루고 그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좌파적 도전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기성 정치에 너무 환멸을 느낀 나머지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2000년 4월 총선 투표율은 총선 사상 최저인 57.2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크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며 좌파의 대안이 기성 정치인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민주당의 ‘개혁적’ 버전(예컨대 노무현이나 김근태 등)을 지지할지도 모른다. 대중의 의식은 갑자기 도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죽은 세대의 전통은 마치 악몽처럼 산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옛 것은 사라졌지만 새 것이 아직 등장하지 못했거나 미성숙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이 아닌 좌파적 대안보다는 민주당 내 ‘개혁적’ 버전을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것처럼 비쳐지게 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광범한 지지로 곧장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대중이 민주당의 ‘개혁적’ 인물들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이 사회에 모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얼마간 반영하는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개혁적’ 인물들이 별볼일 없다는 것과 그들을 지지하는 대중의 정서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민주당의 ‘개혁적’ 버전이 아니라 진보 진영이 사회 변화를 위해 더 나은 수단이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미국에는 사회민주당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노동조합도 허약하다. 그러나 미국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오듯이 기성 정치 체제 안으로 흡수되지 않았다. 랠프 네이더의 녹색당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반자본주의 시위대의 요구들을 담았다. 그 결과 양당 체제가 확립된 미국에서 랠프 네이더는 2백80만 표를 얻어 전국적으로 3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했다. 그는 약 10개 주에서는 5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또, 야생동물 보호 구역에서 원유 시추를 위한 석유 회사들의 굴착 권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 알래스카에서는 10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비

록 사표 논리의 압박을 받았지만, 네이더의 득표는 미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대안에 대한 갈증을 보여 줬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아닌 좌파적 도전의 잠재력을 언뜻 보여 줬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21명의 후보를 내 22만 3천여 표를 얻음으로써 후보자를 낸 지역에서 13.1퍼센트(전체 득표율 1.18퍼센트)라는 비교적 높은 평균 득표율을 올렸다. 특히, 노동자 밀집 지구인 울산과 창원에서 30퍼센트를 득표했다.

2002년은 좌파들에게 시험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노동 대중은 김대중 정부를 심각하게 불신할 뿐 아니라 우파 정당인 한나라당의 부상을 전뜩 경계하고 있다. 두 주요 정당은 대중으로부터 불신받고 있다. 다가올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최대한 많은 표를 얻어 두 정당에 대한 좌파적 반대를 시위할 필요가 있다.

한때 김대중과 민주당에 투표했다 환멸을 느끼고 등을 돌린 사람들은 새로운 대안을 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다.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 김대중 정부에 맞서 싸우자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활동하려 애써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급진화 물결이 요동치는 시기에 살고 있다. 2002년 양대 선거는 광범한 급진화 물결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급진화 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할 것이다.

성장을 위해 우리는 지금 상황에 걸맞은 활동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정치 상황은 좌파가 고립을 강요받는 침체기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대중의 관심을 정확히 포착해 참을성 있게 대화한다면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끌어당길 수 있는 시기다.

그러려면 주 1회 정기 모임과 정기 판매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다함께” 회원 개개인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고 그들과 함께 운동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그 중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정치와 관점을 토론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럴 때 <다함께>를 판매하면 된다. 그 반대로 <다함께> 구독자만을 우리의 청중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함께”의 외연 확대에 장애가 될 것이다. 

강준만 교수의 ‘비판적 지지’를 둘러싼 논쟁

정병호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개혁파’에 대한 “비판적 지지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강준만 교수는 《노무현과 국민사기극》에서 “선량하고 양심적인 보통 시민들”은 수구 보수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개혁 정치인’ 노무현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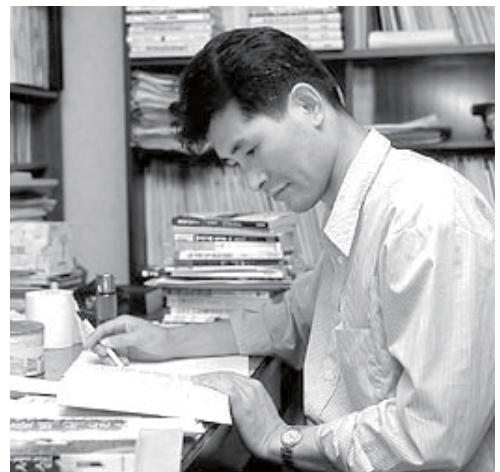
강 교수의 이런 주장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씨는 《이론과 실천》 8월 호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경계하라”에서 “비판적 지지론”이 “노동자 계급에게 자신의 노예 상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력한 환각제” 같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적 지지론”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논쟁은 줄곧 핵심을 비껴가고 있다. 논쟁이 핵심을 비껴가는 이유는 강준만 교수의 “극우 헤게모니 타파 우선주의”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 교수의 말마따나 우리 나라는 아직 극우 헤게모니가 강력하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고 강정구 교수가 빨갱이로 몰려 구속됐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의 보잘것없는 개혁조차 “사회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가 우익들의 권위주의 통치와 연결돼 있다. 군사 독재 정권은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물적·인적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긴밀히 융합됐다. 군사 정권들은 노동자들에게 살인적 노동을 강요했고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군화발로 짓밟았다.

한나라당은 민주화를 염원했던 사람들을 마구 잡



아들여 학살, 고문, 투옥했던 군사 독재 정권의 후신이다. 대자본가들의 재정 후원을 받는 이 당은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과 초보적 개혁조차 “사회주의적”이라고 몰아붙이며 전형적인 레드 콤플렉스를 자극한다.

반한나라당 공동노선

이러한 수구세력의 추악한 본질 때문에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개혁 세력이 연대하여 수구세력을 제압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강준만 교수는 극우 헤게모니를 타파하기 위해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하여 “반(反)한나라당 공동 노선”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연합하는 “반(反)한나라당 공동 노선”으로는 수구세력을 제압할 수가 없다.

수많은 패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 1930년대 스페인 공산당과 사회당은 스페인의 프랑코 파시즘에 맞서 계급적 기반이 다른 공화파와 민중전선을

건설했다. 그러나 결과는 제양이었다. 겉으로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듯이 보이던 공화파는 결정적인 순간에 파시즘과 한 편이 돼 노동자 계급을 공격했다. 함께 민중전선 정부를 구성하던 공산당과 사회당은 독립적인 행동이 제약되면서 반동적 공격에 동조했다.

같은 시기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도 파시스트 조직들의 폭동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당인 급진당과 선거 동맹을 맺어 민중전선 정부를 수립했다. 이 때, 갑자기 불어닥친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공격해야만 했다. 부르주아 정당에 예측된 민중전선 정부는 공격의 도구가 됐다. 최후에는 민중전선 정부 자신의 손으로 공산당을 불법화하고 극우파 정권을 세웠다.

이런 역사적 교훈을 염두에 둔다면,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한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둘 중 하나가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지 않는 이상 항상 기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김대중은 부패에 연루된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거짓 눈물만 닦아 주고, 생존권 보장을 피눈물로 호소하던 노동자들은 경찰력으로 짓밟았다.

강준만 교수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당의 계급적 기반 문제다. 강 교수에 대한 박용진 씨의 비판도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비판적 지지” 쪽으로 기운 사람들의 [개혁을 바라는 심리]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주대환 씨는 이회창과 김대중이 모두 “[신]자유주의자”이므로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은 마치 계급 분석을 염두에 둔 듯하다. 그러나 그는 강준만 교수의 글이 반파시즘 투쟁에 있어 “사회주의자와 자유주의자의 연대를 제안하는 매우 신중한 글”이라고 추켜세웠다(《이론과 실천》 11월 호, “비판적 지지는 없다”). 물론 그는 자유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파시스트들과 결별하고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정책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구상은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

다. 그가 정당의 계급적 기반을 무시한 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단순히 “자유주의자” 그룹 정도로 여기다 보니, 두 당이 계급적 기반을 초월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순진한가정을 했던 것이다.

반이회창인가 반김대중인가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와는 다른 독립적 대안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반이회창 정서와 반김대중 정서 중에서 어떤 정서를 활용해야 할까? 물론 일반적인 차원의 답을 대라면, 강준만 교수 말대로 “두 가지 정서를 다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적 차원에서는 지난 수년 간 대중이 몸으로 경험했던 현실에 바탕해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

지난 4년 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개혁”은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임금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에 시달렸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은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다.

반면, 기업주와 정치인들은 서로 끈끈하게 유착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김대중 정부는 김우중이 분식회계로 23조 원을 빼돌린 것을 눈감아 주고 있다. 옷로비부터 몸로비,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 등에는 박지원, 김홍일, 김태정, 권노갑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서 국정원, 검찰 등 핵심 권력 기관까지 약방의 감초마냥 빠지지 않고 연루돼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부패방지법 제정,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과 같은 민주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정권 자체가 의지가 없거나, 한나라당의 반동적 선동에 언제나 타협하기 일쑤였다.

바로 이 때문에 올해 초부터 김대중 정권의 지지도가 급락했고 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가 부상했다. 강준만 교수의 말대로 정치는 일차적으로 “반사 정치”, “반감 정치”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망가뜨려 설 틈 없이 생존 문제로 고뇌하게 만들고 민주 개혁을 헌신짝 취급하는 김대중을 증오했다.

강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이것은 “지역감정”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만약 지역감정 문제라면, 작년 4·13 총선에서 울산 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전라도 광주에서 김대중 캐릭터 사업이 문단거나, 1997년 대선 때 김대중을 지지했던 광주지역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지금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반(反)김대중 정서는 바로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불철저한 민주 개혁에 반대하는 정서와 맞닿아 있다. 물론 강준만 교수가 주장하듯이, “극우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김대중과 신자유주의도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게다가 문제는 지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장본인이 누구냐는 것이다. 김대중 자신이다.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폐기하고 진정한 민주 개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반(反)김대중 정서를 실질적인 김대중 퇴진 투쟁으로 조직해야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지금처럼 기성 정당 바깥에 강력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김대중 정서가 한나라당 지지로 옮겨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만약 김대중 퇴진 투쟁이 성공적으로 조직돼 김대중이 휘청거린다면, 그 결과 차기 대선에서 이회창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는 집권 내내 김대중 꼴이 되는 것이 두려워 좌충우돌할 것이다. 만약 이회창이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면, 그는 바로 직전까지 김대중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퇴진 압력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을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 세력이 주도하고 일관되게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투쟁에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2002년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해야 할까? 개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이회창이 대세인 지금 상황에 불안해하고 있는 듯하다. 수구 보수세력을 대변하는 이회창이 당선되면, 김대중 정권에서 시도됐던 개혁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앞으로는 개혁 일랑 꿈도 꾸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다. 그래서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려면, 민주노동당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노무현이나 김근태 등의 민주당 내 개혁파를 지지해

야 한다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개혁파가 당선되더라도 진정으로 개혁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민주당의 김대중은 집권 3년 5개월 만에 전임자 김영삼이 집권 5년 동안 구속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다. 김대중 정부의 부정부패는 김영삼 때보다 더 자주, 더 크게 터졌다.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출신 클린턴은 공화당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십 년간 공화당·민주당 양당 정치체제가 굳어진 미국에서 지난 대선 때 녹색당의 앨프 네이더가 부상했다. 네이더를 지지한 영화배우 팀 로빈스는 <네이션>에서 지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잔[수잔 서랜단: 부인]이자 동료 배우]과 함께 IMF-세계은행 반대 시위차 워싱턴에 가서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스웨트숍[Sweatshops: 제3세계 어린이와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는 공장]에 반대하는 팸플릿을 나눠 주는 열세 살짜리 꼬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클린턴 시기 민주당의 결정적 우경화를 목도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투표하기보다는 나의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는 깨달음에 이르렀다.”(<한겨레 21>, 2001년 9월 6일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주장하던 강준만 교수 자신이 팀 로빈스의 글을 보고 “비판적 지지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비판의 논리를 제공했다. 그는 “녹색당이 만만치 않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언가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변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 했다.(<이론과 실천> 10월 호 “비판적 지지”의 망령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결국 개혁 리트머스는 선거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세력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지배계급 정당들은 하나같이 철저한 개혁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에 맞서 싸우면서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대안을 건설하는 투쟁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 진보 진영이 진정한 개혁을 열망하는 광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그러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을 바라는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누가 당선되느냐와 상관 없이, 진보 진영을 지지해야 한다. 

한국 전력 투쟁이 남겨 준 교훈

이정원

김대중 정부가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를 추진하자 정부와 철도 사기업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지난 12월 4일 국무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등 철도 사기업화법이 의결됐다. 철도 노조는 철도 사기업화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즉시 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미 11월 파업 찬반 투표에서 72.23퍼센트로(투표율 92.06퍼센트) 파업에 찬성했다.

12월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에는 휴일이 아닌데도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이 집회는 한 마디로 ‘때가 됐다’는 분위기였다. 한 노동자는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연가까지 내고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를 임시국회(12월 14~29일)로 넘겼다. 연말까지 분위기를 봐 가면서 추진하려는 속셈이다.

정부는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와 대선 주자들의 대권 경쟁으로 집권당의 분열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또한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휩싸인 김대중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런 때에 핵심적인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김대중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조차 의심받게 될 것이다. 동시에 철도 사기업화가 실패한다면 지배 집단 내에서 김대중의 입지는 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솔책

진퇴양난에 처한 김대중은 탄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 철도 노조의 파업 선언에 김대중 정부는 “사기업화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일 경우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중 정부는 “1인 승무 2002년 말까지 유보, 수당인상, 정원 205명 증원” 등의 양보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양보안은 너무나 보잘것 없다. 올해 들어 12월 8일 현재 29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죽었다. 살인적인 노동 강도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한국철도 사기업화 반대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연구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서는 1만 2천8백83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놓은 노동 조건 개선안은 보잘것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이다. 열차 운행에서 기관사들은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는 기관사 1인 승무 도입을 1년간 유보한다는 안으로 기관사들의 환심을 사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1988년과 1994년 기관사 파업 때 8시간 근무, 주휴일 보장 등의 양보안이 제시됐지만 결국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철도 사기업화법 처리가 임시국회로 넘어간 이후 언론은 여·야당 모두 철도 사기업화 추진에 소극적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부의 철도 사기업화 추진이 더딘 것에 짜증을 부린다면 <한겨레신문>은 은근히 기대를 붙여넣는다. <한겨레신문>(12월 12일치)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5명 중 21명이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철도 사기업화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사기업화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한겨레신문>은 노무현 민주당 상임고문이 “사기업화가 하나의 조류이기는 하지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사기업화에 맞지 않는 산업도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밀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철도 사기업화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으며 다른 정치인들과 노무현을 구별해 부각시켰다. 그러나 노무현은 김대중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지 않는

다. 그는 작년 대우차 부평 공장을 방문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거부하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해 노동자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았다.

여·야당 정치인들의 말은 전혀 믿을 게 못된다. 작년 10월 전력 사기업화법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산자위 소속 여·야당 의원들은 “전력 산업이 사기업화되면 요금이 두 배 이상 인상된다”, “국부 유출이다”,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고 법안 백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력 사기업화법은 통과됐고 그 후 발전분야가 자회사로 분할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모두 사기업화 찬성이라는 당론은 확고하다. 기성 정치인들은 심지어 눈치보며 발언할 때조차 사기업화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철도 사기업화법 통과에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사기업화 자체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한 압력 때문이다. 따라서 단호하게 파업에 돌입해 정부와 여·야당 정치인들이 두려움을 느껴 감히 노동자들의 의사를 거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교사

작년 전력 노조는 전력 사기업화법 입법화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갔다고 선언한 이후 두 차례 파업을 유보하며 협상에 매달렸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다시 한 번 파업을 선언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력 노동자들이 서울로 속속 집결했다. 그러나 최초로 직선으로 선출된 오경호 위원장은 두 번 번복 끝에 다시 선언한 파업조차도 협상을 위한 압력 수단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이번엔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조합원들과 사기업화를 강행하는 정부 사이에서 갈등하다 끝내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 전력 노조 오경호 위원장은 파업을 접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나

라를 살리는 구국의 결단”이라며 전력 노동자들을 배신했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다. 파업을 할 경우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흔히 노조 지도부는 투쟁이 노조 조직을 와해시킨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력 투쟁이 패배하자 분할된 발전 자회사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버리고 민주노총을 택했다. 지금 한전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심각한 고용 불안뿐이다.

전력의 경험은 올해 철도 노조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보여 준다. 전력 노조 지도부는 2만 조합원의 운명을 노동자들의 힘이 아닌 협상에 의존했다. 현장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벌일 열의와 자신감이 충분했음에도 말이다.

지금 철도 노동자들 역시 작년 전력 노동자들 못지 않게 투지와 열기가 높다. 철도 노조는 12월 13일 “설사 사기업화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해도 철도 사기업화법안의 철회와 특별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말은 옳다. 혹시 정부가 부담을 느껴 이번 임시 국회 동안 입법화 시도를 미루더라도 사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사기업화 자체를 완전히 무산시키기 위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싸우는 것이 최선이다.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김이진

최근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의 재외동포법은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해 주는 대상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외국으로 나간 동포'로 제한했다. 그 바람에 전체 재외동포 5백60만 명 가운데 2백50만 명을 차지하는 중국과 구 소련 거주자들의 출입국이 막혀 왔다. 중국 거주 한인들은 "재외동포법이 아니라 재외동포차별법"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장을 지냈던 중국 동포교회 김해성 목사는 적절하게도 "자유왕래를 허용하면 거금을 들이거나 목숨을 건 밀입국과 위장 입국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중국과 러시아 한인들은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에서 자신들이 빠진 것에 항의해 왔다.

현재 판결이 발표되자 법 개정 여부를 놓고 찬반이 갈렸다. 하지만 찬반 주장 모두 출입국은 허용해도 취업까지 무차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동의한다.

먼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예로 들자. 그들은 "2년 전 재외동포법을 만들면서 조선족과 고려인을 재외동포에서 제외시켜 이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며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그들이 언제부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그토록 관심을 보였던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고용허가제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자들 아닌가.

그러나 곧 <조선일보>는 보수 우익 신문답게 "노동시장 교란 위험에 대한 대책은 강구돼야 한다"며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책도 "취업 자유 엄격 제한"

이다. 일자리를 위해 출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한다면 '출입국 규제를 푸는 것'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한편 법무부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등은 조선족에 이중 국적을 허용하게 되면 소수 민족 단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법 개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 인구는 중국의 57개 소수 민족 가운데 14번째로 많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선족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한국 국적을 얻게 되면 다른 소수 민족들이 중국의 소수 민족에 대한 통제 정책에 반발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금 중국 정부는 동북 3성 조선족에 대한 통제를 어떤 식으로든 더욱 강화할 공리를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현재 판결에 난감해 하는 것은 단지 중국 정부 때문만은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조선족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 어떻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투다. 여러 안들이 난무하지만 법무부는 설사 법이 개정돼도 취업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는 "손쉬운 잠입 통로가 열려 심각한 안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법 개정 때문에 탈북 난민들이 몰려 올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모두 값싼 노동력이 대거 들어오면 실업이 더 늘어날 거라 입을 모은다. 중국의 한인 노동자들 추방에 반대해온 서경석 목사조차 취업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들이 한국에 몰려 들어오면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고미은 존재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 역사는 '노동시장 교란' 즉 노동력 이동의 역사였다. 한 나라의 경제는 순수한 자국 노동력만으로 결코 운영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세계를 무대로 상품을 만들고 판다. 기업주들은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기업과 은행 그리고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한테 의존한다. 기업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력은 전세계 어디로든 동원된다.

국제노동사무국(BIT)의 1990년 통계에 따르면 오늘날 50명 당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 노동자로 살아간다. 프랑스 인구의 7퍼센트, 벨기에의 9.8퍼센트, 스위스의 18퍼센트, 발칸 3국 인구의 5퍼센트가 이주민이다.

수많은 한국인들도 이주 노동자가 됐다.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2백여 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자>>, 분도 출판사.)

자본주의 경제는 수많은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계속 팽창해 왔다. 19세기 중엽 노예노동이 없었다면 유럽 자본주의는 그 토대를 놓을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 벨리에 고용된 이주 노동자가 없었다면 '신경제'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 노동자들 또한 한국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난을 덜어 주었다. "1997년 현재 이주 노동자의 고용으로 추정되는 잉여의 연간 규모는 자그마치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이주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자>>, 분도

출판사, 103쪽.) 이들은 한국의 일자리를 뺏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고마운 존재들이다.

지배자들의 위선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 출입국과 취업을 규제하려는 이유는 뭘까?

첫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일손이 딸릴 때 노동력을, 그것도 값싼 가격에 대거 들여올 수 있고 반대로 노동력 규모를 줄여야 할 때 맘대로 노동자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기업주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모든 국가는 국경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것을 막는다. 노동력 이동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규제법' 같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 나라를 예로 들자. 한국에서 '외국 노동력 수입' 정책은 1989년~1990년에 가장 활발했다. 당시 노태우는 '북방정책'을 밀어 붙였다. 중국 거주 한인 노동자들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났다. 1991년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장들의 단체는 "임금 상승, 국내 노동자의 3D업종 기피로 기업 활동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생겨 외국인 노동자 수입을 허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루에 수십 개가 넘게 부도나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사장들은 '산업 재해', '저임금',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을 손쉽게 강요할 수 있는 이주 노동자를 원했다.

1993년 김영삼 집권 후 이주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1993년 2월 정부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외국인 보호소'를 서울 회경동에 설립해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들였다. 1994년에는 '출입국 관리법'을 개악해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과하던 벌금을 상향 조정했다.

김대중 집권 후 더욱 늘어난 이주 노동

자,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온 한인 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 규제는 더욱 악랄해졌다. 그러는 가운데 이미 1994년부터 있었던 산업연수생들 가운데 30~40퍼센트가 불법 체류자가 됐다.

한국 정부는 재중 동포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줄여 나갔다. 현재 조선족이 한국에 올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은 국내 기업의 산업기술훈수, 친척 초청 방문, 유학, 국제결혼밖에 없다. 1999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된 배경도 중국과 러시아 한인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는 통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갇혀 있다가 중국으로 추방된 조선족 노동자들은 부지기수다.



출입국 규제를 피해 입국하려다 사기를 당하거나 낮은 임금과 산업 재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조선족 노동자들이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은 지옥입니다", "한국이 슬프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거나 분신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중국 동포의 집'의 한 노동자에 따르면 "잘린 팔과 손이 몇 십 가마니가 될 정도다."

호황일 때는 이주 노동자들을 들이다가 불황일 때에는 여지없이 내쫓는 게 바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주들의 태도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조선족 노동자들이 유

입돼 한국 노동자들이 불리해질 거라는 말은 완전한 위선이다.

국제 연대의 출발점

둘째, 이주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면 지배자들은 항상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건드린다. 지배자들에게 이주 노동자들은 더없이 좋은 공격 대상이다. 지배자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아 내국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이주 노동자들에게 돌리려 한다. "이주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이 경제 침체와 실업을 가져 온다."는 생각을 연중에 퍼뜨리는 것이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들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이민법' 같이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고 개악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듯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웬만한 정치가들이나 재벌, 언론사주들 모두 북한을 자기 집 드나들 듯 자유롭게 오가는데 왜 노동자들의 발목만 묶여야 하는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인들이 그 곳에 정착촌을 꾸리게 됐던 때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만주나 러시아로 보냈기 때문이다. 1931년 조선총독부는 만주 침략과 조선의 파산 농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선 농민을 만주로 이주시켰다.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그들이 고향에 돌아오는 걸 왜 막아야 하는가?

세계화 운운하면서 이주 노동자를 내쫓는 것은 위선이고 모순이다. 우리는 자본의 세계화에 맞서 국적과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는 저항의 세계화를 추구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 한인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배자들의 위선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적 연대의 첫걸음이다. 

누더기가 된 국가인권위원회

이원재



지난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구조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가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 있다. 그런 기대를 반영하듯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연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흘

료들은 인권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엄청나게 침해할 것처럼 엄살을 떨며 국가인권위를 압박하고 있다.

제도적 폭력

상황이 이런지라 인권단체들 내에는 인권위 그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 연대회의 이창수 정책위원은 “인권위의 출범은 인권운동이라는 민간 부문을 국가 제도로 편입시킨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국가의 본질이 폭력성에 있다는 극명한 진리에 눈감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방조하는 사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한된 인권 침해 조사나 차별 행위에 대해 구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경찰, 검찰과 같이 합법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국가 폭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하나의 국가 기관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인권위의 위상을 둘러싼 인권단체들간의 논쟁을 마치 인권위에 들어가기 위한 자리싸움인양 호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뻔뻔스럽게도 이렇게 말했다. “그들(인권운동가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진실의 발견과 권리의 회복이다. 교통비만 있으면 인권 문제가 발생한 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갔고, 적은 생활비로 건디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밤을 새워 일하던 활동가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은 활동가의 진실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할 위험성도 있다.” <조선일보>가 인권운동가들의 ‘타락’을 걱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메스껍기 짝이 없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운동가들은 배제한 채 정부 관료들의 주도로 꾸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괜한 것만은 아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인권위원은 인권단체들이 아니라 대통령이 4인, 민주당이 2인, 한나라당이 2인,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다른 개혁 기구들이 생색내기에 그쳤던 것처럼 국가인권위도 장식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1603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이 이어졌다.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의 석방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찾아온 이주 노동자들, 동성애자 차별을 고발한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그 동안 국가의 인권 침해와 차별 속에서 투쟁을 해온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찾아왔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출범 초기부터 이런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음에도 인권위원회의 규모와 권한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고 하는 정부 관료들의 반발 때문에 사무국조차 꾸리지 못하고 몇몇 자원봉사자와 기획단 인원들만이 업무를 보고 있다.

행정부에는 애초에 인권위원회가 요구한 321명의 직원수를 ‘작은 정부에 맞지 않다’며 1백20명으로 축소하려고 버티고 있다. 법무부는 구금·보호 시설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방문 조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고 요구한다.

김대중 정부는 인권위원회가 대단한 권한이라도 있는 양 말하지만 현재의 인권위원회 법은 인권단체들로부터 누더기라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다 해도 법적 강제성이 없어 권고 또는 중재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며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이나 재판이 끝난 사건은 조사조차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국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경우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의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그럼에도 정부 관

실업과 전쟁에 대한 저항

이수현

지난 12월 13일과 14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이월 벌어졌다.

유럽의 25개국 이상 전국 단위 노조 44개가 주도한 13일 시위에는 10만여 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는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에서 버스를 타고 온 노동자들도 있었다. 벨기에 국내에서만 6백 대의 버스가 동원됐다.

그 외에도 350대의 버스, 6대의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를 비롯한 많은 기차, 4대의 전세 비행기를 비롯한 많은 항공편이 외국인 시위대를 실어 날랐다.

시위대는 실업에 반대하여 완전 고용을 요구했다. 또, 사회적 연대를 통해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억제하고 개발, 사회 정의, 평화를 촉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상회담 개최국이자 올 연말까지 EU 의장국이기도 한 벨기에의 총리는 일부 시위대를 면담한 뒤 그들의 뜻을 “분명히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지금 세계는 20여 년 만에 선진 산업국이 모두 경기 침체에 빠져든 세계 동시 불황의 위기에 처했다. 유럽의 노동자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 문제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0월 파산한 벨기에의 국영 항공사 사베나에서 쫓겨난 노동자들만 1만 2천 명이 넘었다. 분노한 그들은 그 동안 전투적인 항의 집회를 잇따라 열었는데, 1만 명이 모여 행진을 벌인 적도 있었다.

사베나 노동자 미셸 룬에의 말은 대량 해고 뒤에 벨기에를 휩쓴 분노의 일단을 보여 준다. “우리 부부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그래서 우리의 꿈도 사라졌다. 우리 애가 다섯인데, 돈이 없는 집에는 산타 클로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프랑스에서도 다농이나 마크스 앤 스펜서 같은 다국적 기업들의 대량 해고는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노르망디에 있는 코르넬-르-로알의 물랭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이 폐쇄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곧바로 점거에 들어갔다. 프랑스 북서부 알랑송의 물랭 노동자들은 항의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했다. 그런 저항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사장들이 노동자들에게 양보하도록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노동자들도 대량 실업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신뢰성이 의심스런 정부 공식 통계로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미 고용주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업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래서 그 동안 국내의 일자리 ‘학살’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던 영국의 노조 지도자들도 바뀌고 있다. 작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는 영국의 지역 노조 활동가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들과 계속 연계를 맺어 온 영국노동조합회의(TUC)도 이번 시위를 지지하면서 대표단을 파견했다.

14일에 벌어진 시위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다.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금융거래과세시민연합(ATTAC), 저항의 세계화(Globalise Resistance), 제4인터내셔널의 프랑스 지부인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LCR) 등 우리에게 낯익은 반세계화·반자본주의 운동 조직들이었다.

그 날 세 개의 각기 다른 시위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인 “평화를 위한 행진”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유럽의 군사적 개입을 비난하면서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반면에 화염병이 등장한 폭력 시위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39명이 체포됐고, 경찰은 그 중 10명을 기소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대에게 물대포와 최루탄을 마구 쏘아댔고, 이에 맞서 시위대는 차량과 건물 등을 파괴했다.

영국의 공영 방송 BBC 기자에 따르면, 벨기에 경찰도 두 명이나 다쳤다.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은 새 총에서 날아온 돌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동부 유럽의 10개 회원국을 새로 받아들여 EU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까지 6만 명 규모의 유럽 신속대응군(RDF)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3~4천 명의 평화유지군 파견도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 지배자들 사이의 분열상도 드러났다. EU 정상들은 미국이 전쟁을 확대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영국·프랑스·독일 등 열강들의 주도권 다툼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은 EU 공동 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번 브뤼셀 시위는 경기 침체의 와중에서 점차 늘어나는 실업, 사기업화, 빈곤과 전쟁에 맞서 싸우는 저항 운동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중국 자본주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강철구

지난 11월 10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언론과 경제 비평가들은 “세계의 공장”인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중국 경제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했다. 중국 경제는 과거 20년 간 연평균 9.8퍼센트의 고도 성장을 했다.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은 1조 달러가 넘어 세계 7위, 무역 규모는 세계 8위,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대도시와 동부 해안의 경제 특구는 생산물의 판로를 끝없이 넓히려는 국제 자본들을 거대한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있다. 세계 5백대 기업 중 3백 개가 넘는 기업들이 떠오르는 신흥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 아시아 개도국에 몰려든 총투자의 74퍼센트가 중국과 홍콩으로 집중됐다.

중국의 “용틀임”에 대한 찬사가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성급한 논평가들은 중국 자본주의를 세계가 본받아야 할 “시장의 승리”라며 추켜세우고 있다.

불균등한 발전

중국 자본주의 발전이 중국 대중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거대한 빈곤층이 존재하는 나라다. 1999년에 중국 정부는 적어도 3억 명 가량의 중국인들이 공식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인정했다. 세계은행이 최근에 발간한 ‘세계발전보고서 2002년’에 따르면 중국에서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53.7퍼센트에 이른다.

“현대화”는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됐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나 동부 해안 지역의 경제 특구에는 최첨단 기술과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광활한 내륙 지역에는 산업화의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인구의 70퍼센트인 8억 명 가량이 후진적인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발전된 도시 지역에서 불평등은 상상을 초월한다. 베이징 호텔의 ‘황제 스위트 룸’의 하루 숙박비는 1천만 원이 넘는다. 중국 봉급 생활자 평균 수입의 32년치를 합한 것보다 비싼 혼다 자동차 에코드가 올해에만 5만 대 이상

팔렸다. 한편 경제 특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숨막히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저임금을 강요받고 있고, 대도시에는 거대한 빈민촌이 곳곳에 늘어서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에 깊숙히 통합됐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덕에 자신의 미래를 더욱 내맡긴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 경제는 1997년에 “아시아의 호랑이들”을 꼬꾸라뜨린 경제 위기의 여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15억 장의 남자 셔츠, 3억 켤레의 가죽 신발, 2천만 대의 자전거 등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50퍼센트대로 하락했고, 2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중국의 야심찬 수출 경제는 세계 시장에 의존한다.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44퍼센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6.1퍼센트에 그쳤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의 27.8퍼센트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 쑨전위는 “내년 수출 증가율은 올해 수준보다도 낮은 3~4퍼센트에 머물 것”이라며 우려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올 1/4분기 8.1퍼센트에서 3/4분기에는 7퍼센트로 하락했다.

중국 국무원 부총리 우방리는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더라도 중국 경제는 앞으로 당분간 지속적으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에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3억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2억 5천만 중산층”이라는 신화는 무척 과장된 것이다. 더군다나 소비 수준은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 경기가 급작스럽게 후퇴할 때 소비 심리도 얼어붙는다. 또,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최소한의 사회 복지마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은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정치적 긴장

중국 지배자들에게 가장 큰 두통거리 중 하나는 전체 경제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국영 기업 처리 문제다. 국가 관료와 정책 입안자들은 부실 덩어리인 국영 기업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의 상호 연관성 때문에 국영 기업의 파산은 다른 부문을 물귀신

처럼 끌어내릴 수 있다. 국영 기업의 심각한 부실은 금융 부실로 이어졌다. 허약한 지방 은행들은 파산했고, 국영 기업 대출금의 70퍼센트를 담당하는 중국의 4대 상업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았다. 금융권의 부실 채권은 국민총생산(GNP)의 20퍼센트인 2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영 기업의 사기업화 시도는 국영 기업한테서 뇌물을 받거나 이리저리 연관 맺고 있는 분파의 반발을 초래해 지배 계급 내부의 치열한 쟁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열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고무시킬 수 있다. 사기업화는 무엇보다 국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심각한 저항을 낳는다. 중국의 국영 기업은 전체 노동자들 중 70퍼센트를 고용하고 있다. 중국 지배자들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2천만 명의 노동자들을 쫓아냈음에도 앞으로 3천만 명이 더 해고돼야 '비효율'을 없앨 수 있다고 잔인하게 말한다. 국영 기업 노동자들에게 제공됐던 식량 보조와 주택과 연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다. 최소한의 복지 서비스를 산산조각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중국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실업자 문제는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몰려들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대한 도시 빈민층의 존재와 맞물려 정치적 긴장을 자아낼 수 있다.

불안정한 미래

중국 지배자들은 1989년에 수천만 명이 참여한 천안문 항쟁을 탱크를 동원해 유혈 낭자하게 짓밟았다. 그러나 운동의 씨앗을 제거할 수는 없었다. 공안 기구의 잦은 단속과 폭력은 정권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중국 지배자들은 한편으로는 단순한 협박과 공포 분위기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주의에 대한 호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차단하고 싶어한다.

정부의 집요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복지 축소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99년에 약 10만 건의 시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올해 3월 관영 신문인 <차이나 데일리>는 최근 3년 간 상하이에서 노동 쟁의가 매년 40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고 썼다.

만연한 부패와 갈수록 커져가는 빈부 격차, 경제적 · 문화적 개방에 따른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생활 수준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 노동자들의 싸움을 재촉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저항 분위기에 고무받아 작년 베이징 대학에서는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것은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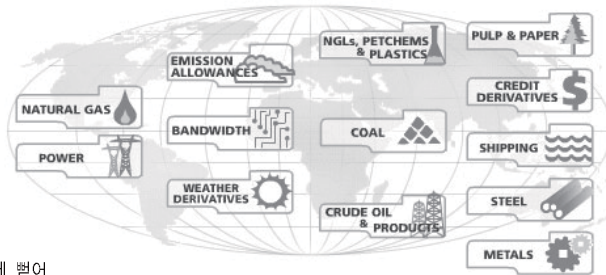
중국 노동자들은 1989년 항쟁의 경험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여겨졌던 지배자들을 혼란과 공포로 빠뜨릴 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독립 노조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제2의 천안문 항쟁이 언제, 어떤 계기로 등장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정치 · 경제적 위기의 국면에 고무될 반란은 1989년의 그림을 단순하게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은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생산 현장에서 발휘하는 집단적 힘은 저항 운동의 힘과 저변을 강화하고, 운동을 이끌 전국적 연결망과 구심점을 건설하는 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1989년 천안문 항쟁은 도시에 국한된 투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골 곳곳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전개되고 있다. 대도시에도 고도로 집중돼 있는 노동 계급은, 국가 권력에 도전하여 자신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농민 대중을 억압과 착취를 제거할 수 있는 투쟁에 끌어들일 수 있다. 거대한 대륙을 뒤흔들 노동자와 농민들의 저항은 중국 자본주의의 신화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이 될 것이다.

중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체제의 모순을 극복한 채 없이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이기는 커녕 광란의 투자 열풍이 공황이라는 유령에 자리를 내주고, 주기적인 경제 위기가 정치적 불안정과 노동 계급의 저항을 낳는 익숙한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 

파산한 자유 시장의 우상



세계 곳곳에 뿔어 있는 엔론의 문어발

지난 12월 2일 엔론의 파산 신청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핵심 기구들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에너지 다국적 기업 엔론의 파산은 자본주의 기업의 파산 역사에서 최대 규모 중 하나였다.

거대 기업과 은행들은 엔론에 대한 투자 손실 때문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다른 회사들이 잇따라 무너져 내리면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이미 침체에 빠진 세계 경제를 더 심각한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바클레이 은행, 크레디리요네 은행, 스코틀랜드 왕립 은행 모두 엔론에 수억 달러씩 물려 있다. 브리티시에너지, 파워젠, 센트리카, 기타 영국의 에너지 회사들이 엔론과 거래했던 수백만 달러도 날아갈지도 모른다. 미국은 최대 90억 달러에 이르는 엔론의 부채 때문에 월가의 거대 금융기관 일부가 파산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엔론은 결코 평범한 기업이 아니다. 작년에 1조 10억 달러의 수입을 올린 엔론은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큰 기업이었다. 올해 6월에 <이코노미스트>는 엔론을 가리켜 “어떤 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성공적인” 회사라고 불렀다. 엔론과 그 관련 회사들은 미국의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부시 부자에게 주었다.

엔론은 부시 부자가 정치 경력을 쌓을 때 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후원했다. 조지 W 부시는 백악관

에 들어가자마자 엔론의 회장 케네스 레이를 “에너지부 고문”에 임명했다. <가디언>은 엔론이 “부시 대통령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면서 니카라과에서 참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자원을 약탈했다”고 논평했다.

아버지 부시와 그의 국무장관 제임스 베이커는 1991년 걸프전 직후에 엔론이 쿠웨이트 신규 발전소 건설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엔론의 계약 조건은 입찰 경쟁사가 제시했던 것보다 22배나 비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시와 베이커는 쿠웨이트에 압력을 넣어 그 계약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엔론은 전 세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영국 보수당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바 있고 지금은 영국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인 존 웨이크엄은 엔론의 이사이기도 하다. 웨이크엄과 보수당 정부는 1980년대에 에너지 시장 규제 완화를 밀어붙여서 엔론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길을 닦아 주었다. 신노동당도 엔론과의 거래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엔론은 노동당에 자금을 제공하고 로비를 벌여 잉글랜드 남서부의 많은 지역에 대한 물공급 사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모잠비크에서 엔론은 땅대 천연가스 지대를 손에 넣고 싶어했다. 모잠비크 정부는 그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빈곤에 허덕이는 그 나라에 대한 원조를 줄 이겠다고 위협했으며, 엔론은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정치가들의 지원을 받은 엔론은 거짓말, 사기, 협박, 뇌물을 이용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뽑아낸 이윤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엔론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은 그 회사의 시장과 고객들이 칭찬해 마지 않던 자유시장과 규제 완화된 자본주의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엔론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는 사기(詐欺)가 필요 없었다”고 논평했다.

엔론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규제 완화를 이용해서 텍

사스의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에서 세계 최대의 에너지 거래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다. 엔론은 닛켄 거품에 뛰어들어 인터넷으로 에너지 계약을 사고 팔았다. 더 나아가 수많은 위험한 금융 거래에 뛰어들었고 세계 각지의 수자원 회사와 발전소를 사들였다. 엔론은 통신장비 다국적 기업들처럼 통신 ‘대역폭’ (주파수 범위) 판매를 둘러싼 거품에 뛰어들어 인터넷이나 그 비슷한 사업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데 도박을 걸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도박에 뛰어들어 따라 대역폭 판매는 수익성이 없게 됐다. 거품이 붕괴했다.

엔론의 파산은 마르코니, 모토로라, 그 밖의 많은 통신 회사에서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 세계 자본주의의 동일한 위기 가운데 일부분이다. 규제 완화된 에너지 시장이라는 카지노에서 도박에 뛰어들어 손실을 입은 스코틀랜드 전력 회사는 이제 영국에 있는 그 회사 노동자들에게 실업과 노동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려 한다.

불행하게도 엔론의 파산으로 고통을 겪을 사람들도 은행가, 투기꾼, 주주는 아닐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금 당장 4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위협해졌고, 연쇄효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다. 웨식스 수자원 회사 노동자부터 헨던의 엔론 사무직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는 이미 해고됐다.

자유시장 체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체제가 위기로 빠져들자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어한다. 

엔론 해고자들

인도에서 암살단을 고용한 회사

엔론은 인도 역사상 가장 큰 부패 스캔들의 핵심 당사자였고,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야만적으로 짓밟았다. 마하라슈트라 주에서 28억 달러의 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엔론은 수많은 활동가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엔론과 그 관계 회사인 뉘홀 전력회사는 암살단과 경찰을 고용해 이들 활동가들을 구타하고 테러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인 24세의 사간다하 바수테브 발레카르는 엔론에게 돈을 받은 경찰이 집에 쳐들어와 그녀를 구타했을 때 임신 중이었다. 미국의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엔론의 “인권 침해 공모”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법률을 악용하고 반엔론 시위 지도자들을 괴롭히고 자의적인 것부터 야만적인 것까지 다양한 경찰의 관행들을 이용해 반대파를 탄압하는 공식적인 정책 덕분에 엔론의 지역 자회사인 뉘홀 전력회사는 직접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인도의 작가이자 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는 엔론이 인도에서 자사의 계획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정치가와 관료들을 ‘교육시켰는지’” 묘사한다. 그녀는 엔론의 계획이 취소될 위협에 처하면 어떻게 “미국 정부가 마하라슈트라 주정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 프랭크 위스너는 나중에 엔론의 이사가 됐다. 지금 엔론 발전소는 마하라슈트라 주 내의 다른 업체보다 최고 일곱 배나 비싼 가격에 전기를 공급한다.

미국의 압력과 인도 정치가들에 대한 ‘교육’ 때문에 인도 정부는 앞으로 40년 동안 해마다 엔론에 2억 1천만 달러씩 지급해야 하게 됐다. 엔론이 계약서에 끼어넣은 조항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엔론은 정부의 자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

크리스마스의 해방

김명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종교 행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의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엄청난 상품 소비 행사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우 크리스마스 기간의 매출액이 1년 전체 매출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래서 몇몇 경건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물질주의를 비판하면서, 진정한 종교적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영성이나 도덕성을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기성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 기독교가 개개인의 영적 구원에만 몰두함으로써 영성이나 도덕성은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고 그럴수록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는 거대한 기업들에 더 많이 좌우되게 됐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그리고 TV나 영화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동화적 이미지와 함께 예수 탄생의 역사적 의미는 거의 무의미한 팬티지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복음서의 내용은 정말 종교적인 의미뿐일까? 복음서 저자들은 종교적인 의미로만 복음서를 작성했을까?

종교를 정치·경제 등과 분리하는 사고방식은 분명 현대에 이르러 확립된 생각이다. 성서가 씌어진 고대 사회는 삶의 다양한 차원을 분리하지 않았다. 성서에는 오늘날의 “종교”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서를 읽는 우리들이 성서를 단지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리처드 호슬리의 책 《크리스마스의 해방》(다산글방, 2000년)은 성서, 특히, 예수의 유아기 설화를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예수의 유아기 설화는 신약 성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다. 호슬리는 마태와 누가의 예수 탄생 설화는 당시 로마 지배 계급의 정치·종교에 대한 피지배 계급의 정치·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누가복음을 살펴보자.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로마 사회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봐야 한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당시 세상을 평정하고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준 “구원자”로서 칭송받았다.

아우구스투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기 전 몇 세대 동안 지중해 동쪽 지역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적 갈등과 혼란을 겪었다. 폼페이우스의 정복에 이어 동쪽으로 파르티아 제국 정벌 전쟁이 일어났으며, 다음에는 로마 전역에서 몇 십 년 동안 계속된 내전이 있었다. 로마 공화국의 분열과 더불어 주변 세계도 분열을 겪고 있었고, 악티움 전투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안토니우스에게 승리함으로써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상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온 최초의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섭리가 우리의 삶을 최고선(最高善), 즉 아우구스투스로 장식했으며... 또한 섭리의 자비로 인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자들] 허락하시어 그는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일에 [평화로운] 질서를 세우실 것이기에, 우리의 신의 탄신일이 그로 인한 세상의 기쁜 소식의 시작을 알리게 됐으므로... 아시아의 그리스인들은 모든 도시에서 9월 23일에 신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반포하며... 첫 달은 씨이저의 달로 지킬 것

이며, 씨이저의 탄신일인 9월 23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존 도미니 크로산, 《역사적 예수》, 한국기독교연구소, 2000년, 96쪽에서 재인용.)

그렇게도 열망했던 평화를 이룩한 아우구스투스를 향해서 찬사와 경탄이 쏟아졌고, 이런 분위기는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됐다. 특히,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받은 신적인 영예는 훨씬 깊은 종교적 특징을 띠고 있었으며, 그 개념은 우주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대 문화권과 그리스·로마 문화권에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었으며, 구원자 아우구스투스 케사르가 함축하는 의미는 분명 종교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로마의 평화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예수가 죽은 지 약 30년 후에 일어난 유대 전쟁에 대한 묘사는 피지배자들이 로마의 “평화”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보여 준다.

뛰어난 용사들은 모두 전사하고 남은 사람들은 나이를 막론하고 길거리에서, 집안에서 학살당했다. 젓먹이 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남정네들을 살려두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노예로 팔아 버렸다. 살육당한 사람의 수는... 1만5천 명에 달했고, 잡혀간 사람들의 수는 2천1백30명을 헤아렸다.(리처드 호슬리, 《크리스마스의 해방》, 다산글방, 2000년, 69쪽)

로마 군대는 “초토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진군해 오는 군대를 피해 달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죽거나 노예가 됐다. 도망간 사람들도 기병대의 사냥감이 됐다. 예컨대 페레아에서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은 모두 대학살의 현상이 됐고, 요단 강은 시체로 메워졌다.”(앞의 책, 69쪽)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이러한 약탈과 방화, 살육, 노예 징발 등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 평화는 예수의 유아기 설화가 형성되고 있던 유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로마 제국의 통치와 유대 민중 간의 일상

적인 긴장 관계는 로마가 요구한 조세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유대의 농민들은 안식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생산되는 작물의 대략 12.5퍼센트를 세금으로 바쳤다. 물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계급에게 바쳐야 할 십일조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외국 지배자들에게 세금을 내다는 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을 의미했다. 메시아적 왕의 전형인 다윗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혹독하게 벌한 적이 있었다(삼하 24장). 따라서 로마의 통치에 맞서 일어난 1세기 유대 저항 운동의 초점이 조세 문제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 탄생의 배경을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의한 인구 조사에 두고 있다. 예수의 부모들은 이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며 메시아가 나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된다. 당시의 지배 계급은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의 승리를 “온 세상을 위한 복된 소식”으로 경축하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예수의 탄생을 “복된 소식”이라고 선포한다.

다음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다. 여기에서는 유대 분봉왕 헤롯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헤롯은 로마의 도움으로 유대의 왕(분봉왕)이 됐다. 당시 로마는 동방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던 파르티아 제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유대를 최전방 기지로 삼으려 했다. 로마는 친로마적인 헤롯을 이용하여 그 일을 이루었다.

헤롯은 로마 군대의 도움을 받아 파르티아 제국의 지원을 받는 유대인 경쟁자를 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곳곳에서 펼쳐진 강력한 저항 운동을 진압하여 “자기 왕국”을 정복했다.

헤롯은 스스로를 “로마인 숭배자” 혹은 “로마 황제 숭배자”라 부르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신전과 기념물들로 나라 안을

가득 채웠고 로마 황제에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온갖 선물과 기부금을 아낌없이 갖다 바쳤다.

헤롯의 무모함과 엄청난 기부금은 과시적인 행동에 익숙했던 고대인들에게조차 놀라운 일이었다. “로마 황제 자신과 아그리파는 헤롯 왕국의 영토는 헤롯의 대범함에는 못 미친다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한다.”(앞의 책, 91 쪽)

그렇다면 대규모 건축 사업과 기부금 등의 자원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헤롯 왕의

과도한 지출로 유대 소작농들이 엄청난 부담을 떠맡게 됐다. 십일조와 로마의 세금, 그리고 소작료의 양은 어마어마했으며 여기에 헤롯의 과도한 지출은 소작농들에게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됐다.

이러한 과도한 부담으로 생기는 불만이 공공연한 저항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헤롯왕은 일련의 성곽, 요새화된 궁전을 건립 또는 증축했다. 게다가 충성 서약, 감시, 밀고자, 투옥, 고문, 반대파에 대한 잔인한 보복 등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경찰 국가라 부르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건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타나는 끔찍한 유아 살해는

헤롯 치하에서 일어났을 법하다. 물론 마태복음은 한 아이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는 곧 현재의 왕인 헤롯에게서 백성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게다가 헤롯 왕의 폭정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예수의 여정은 포악한 왕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모세의 원형적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리차드 호슬리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통치는 로마 황제 및 헤롯의 통치와 갈등 관계에 있으며, 나아가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 예수에 대한 재판에서 그에게 붙여진 혐의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앞의 책, 229쪽.)이며, “선포된 하나님의 혁명적 행위가 종말론적 구원이 아니라 역사적 구원을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앞의 책, 215쪽.)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급 사회에서 피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의 사상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다. 피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의 사상을 뒤틀고, 비꼬고 때론 거부한다. 하지만 지배 계급의 사상을 거부한다고 해서 곧바로 변혁적 의식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역사적 예수의 삶과 복음서 저자들이 의미했을 예수의 삶이 정치 혁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성서의 내용과 성서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분명 혁명가로서의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예수의 메시지는 당시 농민들이 갖고 있던 저항 의식을 좀더 급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리차드 호슬리의 책은 예수의 유아기 설화를 “신화”로 치부하려는 합리주의적 경향과 또 그것을 “크리스마스의 축제”라는 문화적 컨텍스트로 길들여 놓으려는 경향을 견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해방의 이야기 즉,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민중이 해방되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게 해 준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책

〈다함께〉 6호(2001년 11월호)에 실린 ‘유대 시온주의의 본질’에서 저자 아이작 도이치는 팔레스타인이 독립하려면 국제주의적 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저자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국제주의적 주된 연대 대상을 이스라엘 국민, 노동자로 삼고 있는 듯 하다.

물론 팔레스타인인의 해방은 그들만의 투쟁으로는 불가능하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은 아랍 경제권 내에서 주변적이라 진정한 정치적 비중이 결여돼 있다.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산업들, 즉 제조업, 통신업, 운송업의 숙련직 노동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의 파업은 이스라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때문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노동자들과 손을 잡는 것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효과적인 투쟁 방식인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노동자들은 1987년 인티파다를 파괴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다.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이스라엘 노동자들의 투쟁 수준이 높았던 시기에도, 팔레스타인인들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려는 조짐은 전혀 없었다.

물론 점령지 주민들을 탄압하는 이스라엘의 특정 정책에 반대한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었다. 그러나 그들조차 시온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노동 분업과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는 데 물질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아이작 도이치는 바로 이 점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다함께〉 7호 독자편지에 실린 장삼성 씨의 견해처럼 이스라엘 국민들을 쫓아내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대안일까?(물론 독자편지 대부분의 의견에 동의를 보내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곳에서 투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제2의 팔레스타인’과 또다른 분쟁을 낳을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중동의 끔찍한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최선의 길은 중동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아랍 노동자 계급의 단결된 힘에 달려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이 당하는 억압과 아랍 대중이 겪고 있는 비참한 조건 사이의 연관은 끊임없이 연대 운동을 자극해 왔다. 특히 알제리,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의 주요 산업국의 아랍 노동자들은 이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아랍 지배자들은 끊임없이 제국주의와 타협해 왔다.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진정한 성과를 내려면 아랍 지배자들에게 의존하는 민족주의 정치를 거부해야 한다. 아랍 노동자들이 계급 정치로 무장할 때 자신이 바라던 중동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아랍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있는 결정적 힘이다.

김은영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스크린에 마술을 걸다

열한 살짜리 꼬마 마법사 해리 포터의 모험을 그린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최근 개봉했다. 이 영화는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제1권을 각색해 만든 것이다. 해리 포터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46개 언어로 번역돼 1억 2천만 부 이상 팔렸다.

주인공 해리 포터는 열한 번째 생일날, 자신이 전설적인 마법사 포터 부부의 아들이며 독특한 마법의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숙부 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계단 밑 창고같은 방에서 살고 있던 해리는 이제 숙부 집을 떠나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입학하여 신나는 모험을 시작한다.

이 영화에는 화려한 배우 몇몇이 깜짝 출연한다. 특히 영화 <랜드 앤 프리덤>과 <마이클 콜린스>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안 하트가 사악한 어둠의 마법사 볼드모트의 제자 퀴렐 선생역으로 나온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온 가족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다. 2시간 30분이나 되는 상영 시간은 가족 영화치고는 긴 편이지만 그래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이 영화에 매혹될 것이다.

조앤 롤링은 원작에 충실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크리스 콜럼버스가 감독으로 기용된 이유도 원작의 영화화에 관심을 보인 모든 감독 중 그의 관점이 롤링과 가장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을 읽은 사람들은 활자를 보면서 자기가 상상했던 것들이 스크린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반면에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영화의 스토리 전개에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등 영화적 재미는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는 원작의 장점 몇 가지가 사라진 듯하다. 영화에서는 볼드모트와 싸우는 사람이 해리 혼자뿐이지만, 원작에서는 해리가 친구들과 힘을 합쳐 싸울 때 가장 강력하다. 또 원작에는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내용도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아마도 해리 포터에 대한 조앤 롤링의 관점이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롤링은 다국적 기업들과는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나 코카콜라와 1백만 파운드(20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고 통상적인 영화 마케팅을 추진하는 롤링에게 상황은 이제 옛날 같지 않다.

영화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보여 주는 특수효과나 컴퓨터 그래픽은 <스타워즈 에피소드 1—보이지 않는 위험>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러나 장난감·과자·날으는 빗자루 같은 영화 소품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은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이 훨씬 더 뛰어난 듯하다. 

전쟁과 평화

노엄 촘스키, 에드워드 사이드 외, 삼인

“저는 고아입니다 … 어쩔 죽는 게 나올지도 모르죠. 배고픈 건 싫어요. 그게 지금 내 운명이지만요. 음식을 주시든지, 폭탄을 주시든지, 어쨌거나 저는 기다릴게요.”—탈라와르 칸, 8세의 아프가니스탄 소년이 부시에게 보내는 편지 (뒷표지에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자신이 그동안 저질러 왔던 만행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끔찍한 전쟁을 감행했다. 많은 사람들은 테러의 끔찍함도 느꼈지만, 그 이상으로 보복 전쟁의 끔찍함을 느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됐다. 테러 사건의 배경부터 미국의 위선 그리고 이슬람 문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궁금증들이 쏟아졌다. 《전쟁과 평화》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국내외 저명한 지식인들이 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이 책은 9·11 테러의 원인을 단순히 이슬람 과격파에게 돌리지 않고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찾는다. 미국의 저명한 좌파 지식인 노엄 촘스키는 수만 명의 민중이 학살당한 니카라과 등의 예를 들면서 미국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아룬다티 로이라는 인도의 가정 주부 소설가는 미국이 저지른 전쟁(큰 전쟁만을)의 이름만 나열하는 데 한 문단을 써야 했다. 《오리엔탈리즘》의 작가 에드워드 사이드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9백20억 달러를 지원한 것을 폭로한다. 쿠리타 요시로는 오이디푸스가 국가 재난의 근원을 찾으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오이디푸스 자신이었다는 신화를 언급하며 미국이 이와 똑같다고 말한다.

서명의 위선

미국 지배자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해 준다며 이 전쟁이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구호

식량 운송을 중단시킨 당사자가 미국 정부였다. 그 때문에 식량공급이 반으로 줄어들어 난민 7백5십만 명 중 3~4백만 명은 굶어 죽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미국은 탈레반을 비난하고 있지만, 80년대 소련이 중동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해 온 당사자다.

그리고 지원에 사용된 자금은 그들이 비난했던 마약에서 나왔다. 마약이 거의 생산되지 않던 아프가니스탄은 CIA의 개입이 있고나서 갑자기 세계 마약 거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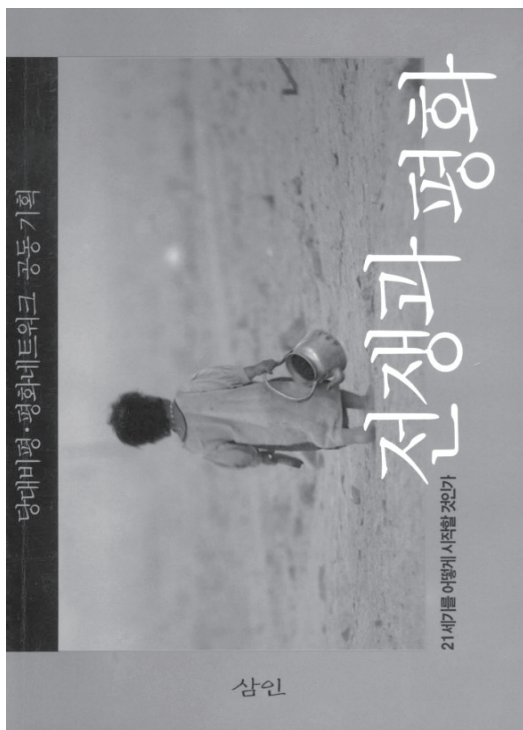
언론들은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이슬람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렸다. 언론은 테러 다음 날 팔레스타인 민중들

이 테러를 환호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비디오는 조작이라고 밝혀졌다. 오히려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다수는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테러 3일 후인 9월 14일에는 밤샘 촛불 행진까지 하면서 테러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 주었다. 하지만 CNN 이나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하는 BBC는 이런 사실을 간단히 무시했다.

미국과 많은 서방 정부들(김대중 정부도 포함해서)은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반동적인 국내 조치들을 취해왔다. 미국은 ‘S 1510’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정보 기관과 경찰이 일반 시민을 마음대로 감시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적 저항과 테러는 똑같은 행위다. 그리고 부시는 테러 방지를 핑계 삼아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비를 증액했다. 미국의 전쟁 비용의 상당액은 삭감된 복지 예산에서 나온 것이다.

아쉬움

이 책의 통쾌한 폭로들은 훌륭하지만, 대안은 아쉬움이 남는다. 대중적인 반전 운동이 진정으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은 거의 하지 않는다. 특히 노엄 촘스키는 미국에게 아프가니스탄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정책을 펴라고 요구하면서, 이것은 유엔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전쟁의 진실과 이번 전쟁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해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위선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잊지 않고 있다. 위에 소개된 것 이외에 이 책은 이슬람이나 북미관계 등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거의 다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한다. “섬멸되어야 하는 것은 전쟁이다.”

승병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역사비평사

일본 정부는 미국의 보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여섯 척의 함대와 1천5백 명의 자위대를 파병했다. 일본 정부는 이참에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꾀하고 있다.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반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벌어진 운동을 평가한 책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운동의 여러 쟁점을 한일 양국의 전문가 16명이 쓴 짧은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일본의 사회 우경화의 배경과 교과서 왜곡의 문제점, 일본 우익의 역사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올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반대 운동이 이전 역사 왜곡 반대 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평가한다.

“1982년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서술 내용이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던 첫해였다. 한국 언론들이 연일 일본의 역사 왜곡 내용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기사를 1면에 게재하면서 국민 감정도 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9월 27일에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군사 독재 정권의 반민족성을 폭로하며 1만 명의 학생들이 종로 일대에서

가두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국내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언론을 통해 더이상 분노와 감정만으로는 일본과 싸워 이길 수 없다며 ‘극일’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언론을 동원해 ‘국민 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에 벽돌 한 개씩을 쌓아 독립기념관을 만들자는 독립기념관 범국민 운동을 펼쳤다.

당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반대하는 운동은 민족 사관을 기반했고 초기 운동을 주도한 보수 언론과 관변 단체는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올해 있었던 운동은 “폭넓은 시민단체들 간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연대와 일본 내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아시아 연대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일회성 투쟁이나 반일감정으로 흐를 수 있는 운동 방향을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또한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학계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서만 논의되던 국사 교육 문제를 공론화했다.

“국정 교과서 제도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역사 해석의 국가 독점이다. 국사 교과서가 한낱 정권의 통치 이념을 전달하고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러다보니 국사 교과서가 이념적 편향을 보이고 있어 집권 세력이

된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해방공간에서의 좌익과 사회주의자들의 독립 운동에 대해서는 역사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 근현대사에 대한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19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교과서 반대 운동 과정을 설명한다. 2차대전 이후 이처럼 많은 집회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이 같은 성공은 그 동안 성장해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로 평가한다. 또한 독일에서 나찌 잔재 청산이 가능했던 것은 “서독 재무장, 전몰장병 추모일 제정, 베트남 참전 문제에 전후세대가 투쟁”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답으로 읽는 일본교과서 왜곡》은 깊이 있는 분석이나 구체적인 대안 지적이 부족하고 왜곡된 역사교과서 반대 운동의 성과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책에 실린 각종 자료들과 정보들은 이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원재



키신저 재판

크리스토퍼 히친스, 아침이슬

‘두 궤도 정책’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리며 태양을 공전한다는 케플러의 법칙을 떠올리거나 미국의 우주 전략을 연상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안하게도 둘 다 아니다. ‘두 궤도 정책’은 미국이 칠레의 좌파 정권인 아옌테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 쿠데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7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헨리 키신저는 베트남 전쟁을 1968년에서 4년이나 지연시켜서, 베트남에서 끝날 전쟁을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확대하고 무고한 민간인 1백만 명을 살해했다. 방글라데시(당시 동파키스탄)의 학살극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를 침공해서 20만 명을 죽였다.

1974년 키프로스에서 그리스 군사정권의 사주를 받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국은 그리스와 터키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칠레에서 키프로스까지 비극의 희생자는 무고한 민중들이었다. 역겨운 이 일의 배후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키신저가 존재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가 쓴 <키신저 재판>은 1970년대 초반 세계에서 일어났던 전쟁 범죄, 학살, 암살, 납치에 연루돼 있는 키신저의 범행에 대한 ‘기소장’이다. 따라서 전범인 그를 국제재판소에 세우지 못한다면, 전쟁 범죄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어떤 독재자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중심 주제다.

한편 우리는 라텐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그가 은신하는 동굴에 독가스까지 살포하겠다는 미국을 떠올리며 묻게 된다. 왜 미국은 진정한 테러리스트인 키신저는 내버려 두고, 라텐에게만 법의 심판을 강요하는 것일까?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키신저가 왜곡한 진실과 학살의 무게와 라텐의 죄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고 누가 전범

재판소에 서야 할 장본인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베트남전의 비극

미국이 개입하여 수백만 명이 죽은 베트남 전쟁은 1968년 남·북 베트남 협상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닉슨을 밀고 있었던 키신저가 남베트남에게 민주당 정부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평화협상은 결렬됐다.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 포커판의 히든 카드로 전쟁은 4년 연장된 것이다.

그 결과 1961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으로 죽은 사상자보다 더 많은 시체와 이들 가족의 원한이 커져서 쌓였다. 물론 이 전쟁의 수혜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닉슨과 보잘것없는 학자에서 막강한 권력자로 변신한 키신저였다. 게다가 키신저는 협상 지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베트남

평화에 기여했다고 노벨상을 거머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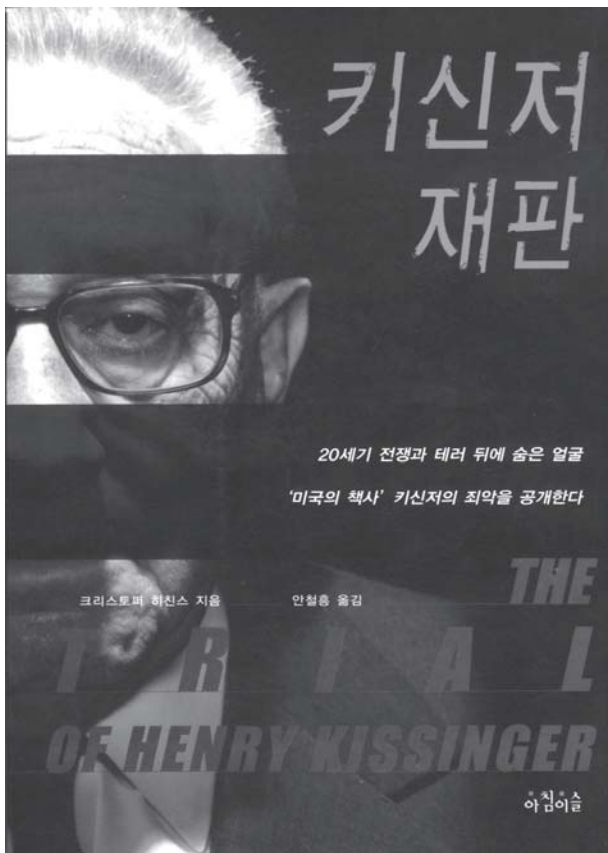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4년 동안 죄 없는 민간인에게 폭탄이 4백 50만 톤 투하됐다. 제2차 세계대전 내내 투하된 폭탄을 모두 합해도 2백4만 4천 톤밖에 되지 않았다. 경악할 만한 일은 캄보디아에 대한 폭격 프로그램의 암호명이 ‘아침’, ‘점심’, ‘저녁’이었다. 키신저와 미국 군대는 캄보디아인의 떨어져 나간 살점과 그들의 뜨거운 피로 살생의 식탁을 차렸던 것이다.

키신저의 위선

피의 학살이 있으면 그 뒤에는 꼭 키신저가 있었다. 이 역사적 명제를 증명해 주는 것이 동파키스탄, 동티모르, 칠레의 비극이다. 1971년 동파키스탄 선거에서 아와미 동맹이 압승하자 군사 정권

은 국회소집을 연기했다. 서파키스탄의 야하 칸 장군은 이에 항의하는 수많은 동파키스탄인들을 학살하거나 난민으로 만들었다.

닉슨과 키신저는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신중하고 빈틈없이 행동해 주어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키신저는 살인자 야하 칸이 주선한 중국 초청장을 받았다. 결국 키신저와 중국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다.

1975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공했고 그 뒤에는 포드와 키신저가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침공에 맞선 동티모르인들이 침공 당일에만 10만 명이 미국 마크가 새겨진 무기에 죽었다. 그런데 미국은 폭력 사용을 우려하며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년이 흐른 뒤 한 동티모르인이 그 날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키신저는 세계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느라 동티모르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학살을 승인하고 그 대가로 무기를 팔아먹는 악순환의 고리를 칠레에서 볼 수 있다. 키신저는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유명한 표현으로 단순히 “국민들이 무책임”하다고 해서 특정 국가들을 “마르크스주의 국가가 되도록” 놓아두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칠레에서 아옌데 정권의 등장은 칠레와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게는 재앙이었다. 아옌데의 집권을 막기 위한 쿠데타가 필요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졌다. 칠레군 참모총장 슈나이더가 군부의 선거 개입을 반대한 것이다. 결국 슈나이더는 납치돼 살해당했고, 아옌데도 비명횡사했다. 결국 미국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의 선례를 칠레에서 남겼다. 슈나이더를 죽이기 위해 칠레의 군인들에게 지원한 돈과 무기가 바로 그것이다.

아옌데 사망 후 피노체트 정권이 등장하자 미국은 식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칠레 쿠데타를 위해 미국이 치른 비용은 칠레의 무기 구입으로 깔끔하게 청산되는 것이다. 그 뒤 미국은 반체제 인사들을 납치·고문·살해하는 ‘콘도르 계획’을 실행했다. 그러나 키신저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실제 상황을 잘 몰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나 그는 1969~76년에 ‘위원회 40’의 의장직을 맡았는데, 이 ‘위원회 40’은 미국 대외정책을 총감독했다. 법의 공소시효에 예외가 있다면 키신저 같은 악랄한 자를 법정에 세우기 위한 것이다.

키신저를 법정으로

남미 국가의 독재정권이 몰락한 뒤 키신저의 ‘복사본’들이 재판장을 받거나 감옥에 가 있다. 하지만 전범의 ‘원본’인 키신저는 법의 심판에서 자유롭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피노체트의 죄는 공산주의로 치닫는 정부를 전복한 것이며, 자신은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키신저는 국제 및 국내 테러리즘을 가장 많이 승인하였다. 이런 맥락에

서 이번 미국이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테러범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고무하는 자들은 테러범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키신저의 말은 위선의 극치다.

키신저의 잔악 행위들은 30년 뒤에 문서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으로 속속 폭로되고 있다. 권력자의 놀이로서의 전쟁에 희생당한 자들이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키신저를 법정으로 세우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971년 ‘뉘른베르크’ 원칙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에 관여한 미국 정치가와 관료는 전범 재판소에 세울 수 있다. 미국도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키신저는 자신이 죽은 뒤 5년이 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자신의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하지만 미국의 비정부기구들이 키신저 사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칠레의 슈나이더 장군 유족도 키신저를 기소하려 하고 있으며, 수하르트 독제가 타도된 뒤에 동티모르의 집단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백만 명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키신저를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미국의 현실은 법 앞의 평등과 천부인권이라는 헌법과 수정조항이 죽어버렸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걸핏하면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문제삼는 미국의 정당성도 훼손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난민을 죽이는 행위는 키신저가 개입한 칠레, 동티모르, 베트남의 비극이 재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현재 권력의 최음제에 취해 사는 그에게 권력의 대가가 비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82세의 피노체트도 법정에 섰던 것처럼 그도 피고석에 서도록 그가 제발 장수하기를 바란다.

현재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애국, 그것에 비판적인 것은 배국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외정책의 상징적 인물인 키신저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거짓을 비틀어서 진실인 양 행세한 인간에게 죄값이라는 계산서를 언제가는 꼭 보낸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키신저 재판〉은 몇 명을 죽이면 살인이 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현실이 정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키신저가 미·소 테탕트와 미·중 수교를 이뤄낸 외교전략가라는 세간의 평판을 깨고, 그의 본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준다.

히친스는 키신저의 공범들이 죄를 받고 있는데, 혼자서 그가 벌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은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거미줄과 같다”는 고대 철학자 아

나카르시스의 경구가 현실에 적용된 사례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1990년 이전에는 좌파로 활동하다가 우경화했고, 제2차 걸프전에 지지를 보냈던 자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그는 키신저가 베트남 전쟁에서 죽인 수백만 베트남인들보다 미국에서 테러로 죽은 2만 5천 명을 더 크게 부각시킨다. 그는 미국인이 죽었다는 사실 앞에서 지식인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을 잃고 있다.

그는 키신저가 베트남 전쟁을 라오스와 캄보디아로 확대한 것을 미국 공화국 역사상 가장 사악한 행위라며 분노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기소장에서 이 사건은 중심적이지 않다. 현재 미국의 아프간 전쟁 덕분에 지식인의 자기검열이 심해진 이 상황에서(그의 책이 미국에서 나온 것은 2001년 1월이고,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12월이다) 미국 개입 정책의 정점에 서 있는 키신저를 글로 고발한 히친스가 행동으로도 그를 고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김정숙

부유한 노예

로버트 라이시, 김영사

“부유한 노예? 어떻게 노예가 부유할 수 있어?” 이 책 제목을 본 한 후배의 말이다. 저자는 신경제가 가져다 준 각종 혜택으로 부자가 됐으면서도 더 불안해하며, 더 오래, 더 열심히 일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으면 안 되는(대체로 중산층인)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며 있다.

그러나 ‘부유하다’는 말은 라이시가 인정하듯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 전과 비슷하게 살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일부의 삶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 책의 원제는 ‘The Future of Success’ 즉, ‘성공의 미래’이다. 원제만 보면 서점가에서 유행하는 혼란 치세술 또는 성공 비결 — 예컨대,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 에 관한 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법도 하다. 상업적으로 꽤 성공을 거두어온 대형 출판사 김영사는 이 책을 출판하면서 제목을 ‘부유한 노예’로 바꿔 달았다. 또 번역하면서 노동자를 모두 근로자라는 말로 고쳤다. 또, 중산층이라고 번역된 말은 정확히 어떤 사회 계층을 뜻하는지 다소 혼란스럽다. 어쨌든, 이 책이 10월 말에 나와 벌써 3쇄를 찍었으니,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듯하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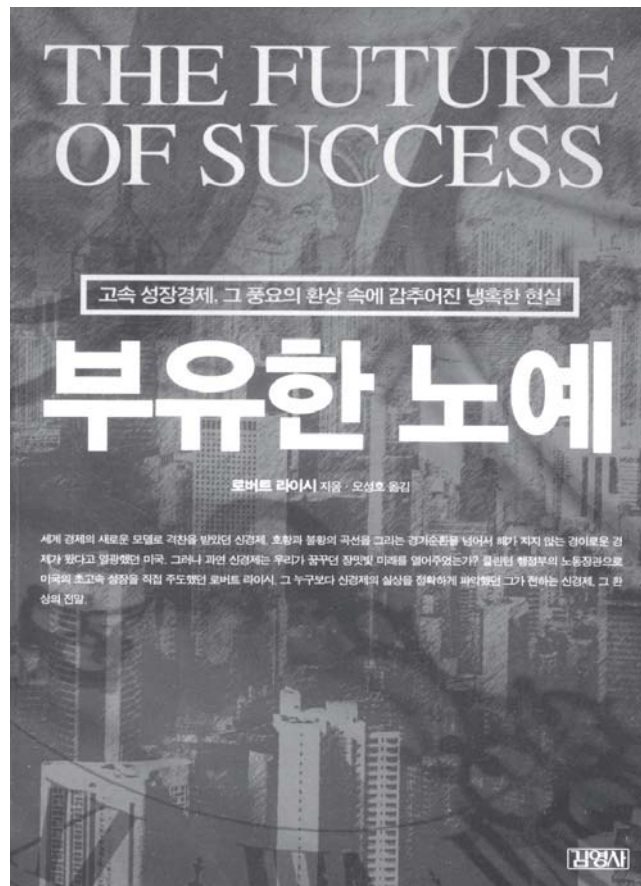
턴의 절친한 친구이자, 클린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장관이었고, 그 후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낸 미국 상류 계급 사람이다. 이런 경력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진보적 경제학자’라는 책 표지에 나온 수식어가 어울리는지 의심이 갈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읽어볼 만하다.

이 책은 미국의 신경제가 미국 사람들의 삶 전반에 미친 다양한 결과들에 관한 대중적인 사회학 보고서다. 정확한 최신 통계도 풍부하게 제시해, 미국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로버트 라이시의 통찰력은 놀랍다. 로버트 라이시는 책 몇 군데에서 미국 신경제가 가져온 모습이 산업 자본주의 초기 현상과 매우 비슷하다고 말한다. 심각한 빈부 격차로 부유한 사람들의 천국 같은 삶과 빈민들의 지옥 같은 삶의 대조, 8시간 노동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긴 노동 시간, 과중한 업무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어 가는 현상 등. 때때로 이 책은 엥겔스의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와 비슷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시가 묘사한 현실은 우리 나라에서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가장 우익적인 지배자조



차 사회 불안을 근심할 정도로 너무나 커진 빈부 격차, 부의 소유 정도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민간의료 보험 제도, 부자들의 완벽한 학교와 가난한 사람들의 뚱뚱 학교로 나뉘어질 자립형 사립고 추진 시도 등.

그러나, 이 책의 약점도 만만치 않다. 신경제의 빛과 그늘 중, 빛 부분을 설명하는 장의 대부분은 신경제와 세계화 예찬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와 그다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신경제 이전과 이후의 고용 형태의 변화에 대한 설명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압력들에 대한 분석은 미국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한 뼈아픈 보고서다. 한편, 은근한 암시로 사실상 미국식 ‘정실’ 자본주의를 통쾌하게 폭로한 것, 신경제가 불러온 가족의 변화에 관한 탁월한 분석, 첨예한 계급적 구분이 주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은 매우 흥미롭다.

지금 열거한 것들이 이 책의 진정한 가치이며 미국 계급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여느 맑스주의자의 눈보다 예리하다. 비록 라이시는 이 책 곳곳에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좌파를 국수주의적 극우파들과 암암리에 동일시하며 좌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미국 계급 사회의 현실에 대한 그의 분석은 누구보다 좌파적이다.

그러나 진실을 직시하는 것과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발자크가 그의 소설에서 프랑스 계급 사회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줬지만 그 자신은 왕당파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버트 라이시가 대안을 제시한 “사회적 선택”을 보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제안들이 나온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조금 거두어 빈곤층의 의료, 교육, 주택 지원을 위한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든가, 국제 금융 자본의 거래에 조금의 과세(아마도 토빈세 같은)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조금’이 강조된 이유는 라이시의 제안에 따르면 반드시 조금이어야 하기 때문).

그런데 라이시는 왜 자신이 노동부 장관이었을 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는 우리 모두가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공범 의식을 주입한다. 그래서 이 책 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하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 그것이 문제다.” 그런데 라이시가 말한 ‘우리’는 아무리 봐도 미국 지배 계급이다. 라이시는 상류층의 도덕적 각성을 바라고 있다.

라이시의 문제 제기와 대안을 따라가다 보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위에 어른거린다. 하나는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다. 그는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장

에 관한 비전을 신문 광고에 내고 카페에 앉아 이에 관심 있는 부르주아지가 나타나기를 평생 기다리다 죽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경제학자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누구보다 분명하게 자본주의의 비밀 — 공황을 피할 수 없는 치명적 결함 — 을 눈치챘지만 부르주아지와 한편이라는 자신의 계급적 한계 때문에 자본주의의 결함을 잠시 봉합하는 데 그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계급 사회의 현실에 대한 로버트 라이시의 리포트는 훌륭하다. 그러나 대안은 보잘것 없다. 무엇보다 그는 이 보잘것 없는 대안조차 오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조박은정

이성시, 삼인

만들어진 고대

‘민족’이라는 개념은 19세기 국민 국가 형성기에 만들어졌다.

“민족의 뿌리찾기”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서유럽에서 “농민층을 프랑스인으로 혹은 독일인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도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

민족, 국가, 국기, 부활된 전통 의례 등에서 유포, 영웅에 대한 기념비, 박물관까지 우리가 민족적으로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19세기 이전에는 매우 생소한 개념들이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과거의 코드들을 새롭게 닦아내고 색칠하여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치 초역사적인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듯이 보이게 하는 작업들이 대체로 근대 역사학의 임무였다.

오히려 근대 역사학 자체가 19세기 국민 국가 형성과 민족주의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동양 3국(중국, 일본, 한국)의 근대 역사학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았다. 흡스봄이 지적하고 있듯이 “동양의 민족주의는 서양의 영향과 서양의 정복이 가져다 준 결과로서의 산물이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의 식민 지배의 경험을 여기다더해야 할 것이다.

이성시의 《만들어진 고대》는 동양 3국의 민족주의

적 고대사인식에 대한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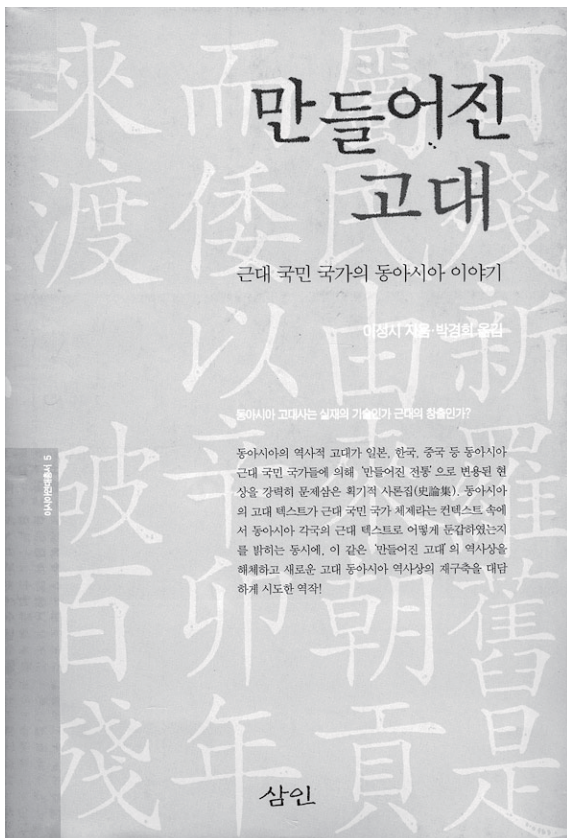
이 책은 서유럽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농민층을 프랑스로 만듦” 작업과 같은 ‘국민 의식’의 형성과 국민 통합 과정에 역사가학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업이 광개토대왕비를 둘러싸고 지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고대사 논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광개토대왕비는 당시 고구려의 상황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비문일 뿐이다. 원래 이 비문은 고구려 지배 공동체 5부인들 사이에 한정된 의미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비문은 1천2백 년이 지난 지금 근대 일본, 근대 한국, 근대 중국과 관련된 의미로 읽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왕권의 강화와 내부 결속의 강화를 위해 지배 공동체를 위협하는 역할로 상징된 ‘왜’는 아무런 의의 없이 근대 일본으로 읽혀지고 있다.

동양 3국은 심지어 원래 비문에는 있지도 않은 새로운 의미를 창출했다. 근대적 의미로 다시 태어난 광개토대왕비는 동아시아에서 국민 형성을 위한 담론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를 과거에 투영해 과거를 배타적으로 차지하려는 경쟁이 각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거를 차지하려는 경쟁

동아시아 각국은 발해사를 어느 나라에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한다.

중국은 발해를 당나라 시대 소수 민족인 말갈인 지방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측은 한족이 중국사에서 주된 역할을 해 왔다고 보기 때문에 말갈인의 국가였던 발해는 독립된 민족이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측은 발해의 왕실 및 지배 집단이 고구려인이라고 단정하고, 발해는 고구려의 계승자이며 고구려의 부활·재흥이라고 보고 있다.

양국의 발해사 인식에 대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오늘날 민족과 국가에 대한 통념을 암묵적으로 발해사 분석의 틀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나아가 각국이 현실의 정치 과제에 맞추어 발해사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구의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소수 민족이 전 국토의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지역을 중국의 정통성과 역사적 근거가 있는 영토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

또 남북한은 발해사를 한민족의 국가로 간주함으로써 오늘날 남북 분단 상황의 극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발해·신라 병립시대에 투영시켜, 같은 민족이 남북으로 병립해 있는 부자연스러움과 불완전함을 환기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일국적 역사 인식은 발해를 형성하게 했던 당시 여러 말갈족들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배제하고 만다.

그래서 저자는 일국사라는 관점을 뛰어넘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주장은 여러모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동양의 ‘국사’ 체계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엄연히 존재했던 다양한 부족들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이들과 상호 작용했던 한반도, 중국, 일본의 지배정치 체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책은 우리가 배워왔던 권위적이고 편협한 국사체계를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의 신화와 왕조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던 여러 민중 집단들이 아래로부터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규안

월간 《다함께》 지난호 목차

7호(2001. 1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세 분석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인/에드워드 사이드
미국 정부의 생화학 테러
팔레스타인인들의 민중 봉기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전쟁과 근본적 사회 변혁
집권당의 위기, 대안은 무엇인가
파산한 김대중 '개혁'의 전도사 노무현
구로울/동대문을 선거 활동 평가
현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
수전 조자의 WTO 비판
왜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가
철도 노동자들의 사기업화 반대 투쟁
마약 합법화를 옹호하는 주장
의사들의 안락사·낙태·대리모 지침
사형을 폐지하라
네그라의 《제국》비평
김대중의 시장주의 교육 정책 비판
교사들은 왜 7차 교육과정안을 반대하는가
일본 경제 위기



6호(2001. 11)

김대중은 전쟁 지원을 중단하라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아프가니스탄
갈림길에 선 파키스탄
부시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이유
전쟁, 거짓말 그리고 언론
유엔
전쟁을 반대하는 주장들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전쟁에 대한 사회 변혁가들의 태도
이슬람에 대한 서방의 편견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일본의 군사대국화
세계화 반대 운동 평가와 전망
부패-자본주의의 만성 고질병
출입국 규제를 철폐하라



5호(2001. 10)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정책
미국 정부가 최대의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탈레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즘 비판
세계 경제는 공황으로 가는가
김수행 교수 강연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유엔 인종차별철폐회의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신상 공개
시장이 낳은 주택대란



4호(2001. 9)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민주노총 수배 간부들의 자진 출두 이면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합법화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증액
제노바 G8 회담 반대 시위
소련 붕괴 10주년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부시의 MD 계획에 대한 반대 운동
아르헨티나
메가와티의 불안한 앞날



3호(2001. 8)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모든 탈북자의 명명을 허용하라
헬렌 켈러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민주노총 상반기 파업 평가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클리백 가격을 인하하라
매매춘 합법화
부시 행정부 6개월 평가
제노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
이스라엘 : 중동 전쟁의 화근



2호(2001. 7)

심화되는 정치위기
진정한 폭력
서울대 개혁 논란
안락사 합법화 논쟁
<민>지의 모호한 김대중 퇴진론
모성보호법 - 후퇴 없이 즉각 개
정해야
6.15 공동선언 1년을 돌아보며
새만금 간척이 가져올 결과들
민족과 계급
격동의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7호(2001. 5)

케백의 반자본주의 시위
무기 살 돈을 의료비로 돌려라
미친 스타 워즈 계획을 중단하라
충동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부시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
미스코리아 대회 - 여성 차별 촉진
계속되는 경찰 폭력 위험
경찰은 왜 그리도 폭력적일까?
김대중 퇴진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비판한다
일본 사회의 양극화와 역사 교과서 왜곡

지금 연락하십시오. 02-961-4546
지난호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쟁으로부터
반전 비폭력 운동으로의 여행에
동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모험은 이것이다.
어떻게 전쟁 없이,
투쟁하여 정의를 획득할 것인가.
- 하워드 진

